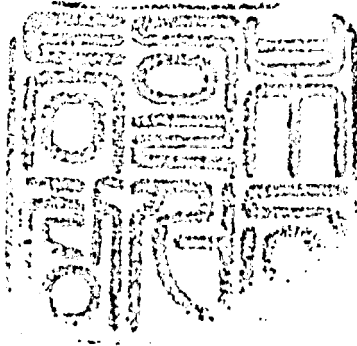


통일과 21세기

- 전환기의 통일문제 이해 -



통일교육원

머 리 말

이제 21세기가 3년도 채 남지 않았다. 2001년 1월 1일에 시작된 21세기가 우리 앞에 가깝게 다가선 것이다.

21세기에 들어서면 초기의 어느 시점에 한반도에서도 통일이 이뤄질 것이라고 보는 것이 국내외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다. 그래서 흔히 21세기는 한반도 통일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우리 겨레는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국권상실의 비극을 겪었다. 1910년의 경술국치 때부터, 아니 실질적으로는 1905년의 을사 5조약 때부터, 우리 겨레는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했다.

20세기 중엽이던 1945년에 일제는 패망했고 우리 겨레는 빛을 되찾았다. 이른바 광복의 기쁨을 맛보게 됐던 것이다. 그러나 그 기쁨은 잠시였고, 우리 겨레는 미국과 소련의 분할 점령이라는 외세 통치의 기간에 들어갔다. 이로써 외국군 분할 점령의 시대가 시작됐던 것이다.

우리 겨레의 반만년 역사에 한 차례도 없었던 이 외국군 분할 점령의 기간에 우리 겨레는 하루 빨리 통일 독립의 민족국가를 세우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1948년에 이르러 미군 점령의 남한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졌고 소련군 점령의 북한에서 이른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세워졌다. 이로써 분단 시대가 시작됐다.

그 뒤 우리 겨레는 분단을 해소하고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참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과정에서 여러 통일 방안들이 제시됐다. 국제사회에서도 이 방면에 적지 않게 이바지했다.

이러한 국내외의 움직임들을 고려해, 우리 겨레는 이 분단 시대가 20세기가 끝나기에 앞서 마감되리라고 믿었다. 그러나 그렇게 될 개연성은 사실상 보이지 않고 있으며, 분단 시대는 21세기로 넘어 갈 것 같다.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다. 분단국가이던 베트남도, 독일도, 예멘도 모두 통일을 성취했지만, 우리 겨레만 여전히 분단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분단 상태에 머물러 있는 정도가 아니다. 군비경쟁이 강화되는 가운데 남북한 사이의 군사적 긴장관계는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분단의 요인인 냉전질서가 해체된 것은 분명히 세기적 변화인 동시에 분단해소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계기라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의 몰락을 비롯한 세기말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세계질서의 구축을 위해 공존논리가 대두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평화와 번영을 강조하는 역사적 조류가 형성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며, 통일을 민족적 과제로 삼는 우리에게 커다란 희망을 주는 것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21세기에 우리가 반드시 통일을 성취해야겠다고 결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실제로도 그렇게 된 개연성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른바 세계화의 물결은 생각보다 높고 험난하다. 우리가 성공적 미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갖추어야만 한 것이다. 어떤 국가나 민족을 막론하고 자신의 생존과 이익을 위해 새로운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틀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한반도의 현실에서 그것은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관계의 변화이고 통일한국의 기본구조를 만드는 일이 된 것이다.

우리는 역사와 운명을 같이 한다. 지금은 분단상황이라는 미완의 역사를 발전시키고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서 미래를 진지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다. 통일은 분명히 우리에게 도진인 동시에 기회이다. 따라서 이러한 역사적 사명을 자각하는 것이야말로 한반도의 미래를 짊어질 우리 젊은이들의 위대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 중대한 전환의 시점에서 우리 겨레 모두의 꿈인 통일의 과제를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 이 작은 책을 쓰게 됐다. 우리 겨레는 왜 분단됐는가? 분단 이후 남북은 각각 어떤 길을 걸어 왔으며 통일을 위해 어떻게 노력해 왔는가? 오늘날 한반도 안팎의 정세는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 이러한 여건 속에서 우리 겨레가 통일을 위해 걸어야 할 길은 어떤 길인가? 우리 겨레의 꿈은 언제쯤 어떻게 달성될 것인가? 통일 한국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러한 물음들에 대답하려는 한 작은 시도가 바로 이 작은 책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이 통일의 과제에 대해 결정적인 해답을 내리겠다고 욕심을 내려는 것은 아니다. 이 책은 그저 하나의 작은 토론 자료가 되기를 바랄 뿐이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 책을 읽고 통일의 과제에 대해 각자 나름으로 생각을 깊이 하게 된다면 지은이로서는 기쁘겠다. 그러한 점에서 젊은 독자들의 비판과 건의를 기대 하고자 한다.

1998년 정월
지은이

통일과 21세기

- 전환기의 통일문제 이해 -


우리 겨레는 왜 분단됐는가? • 7

분단국가들은 각각 어떻게 분단을 해소했는가? • 13

남북한은 각각 통일을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해 왔나? • 19

한반도 통일문제의 새로운 변수 • 37

■
북한의 위기 상황



차 례

국제적 해결방식의 측면 • 49

■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 강대국들의
기본자세와 우리의 대외정책 방향

민족내부적 해결방식의 측면 • 59

■
남북간 교류협력 및 정치적 협의의
기본원칙과 전략

통일한국의 미래상 • 65



우리 거래는 왜 중단됐는가?

통일의 방향과 방법을 생각하기에 앞서 우리 거래가 왜 중단됐는가를 살피는 것이 좋겠다. 분단의 원인을 정확히 알아내야 분단을 극복하는 길을 제대로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 국제형 분단으로서의 독일의 분단

1945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연합국의 승리로 끝나면서 세계의 여러 곳들에서 분단국들이 나타났다. 유럽에서는 독일이,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베트남과 중국 및 한반도가 대표적인 경우에 속한다. (머리말에서 예로 들었던 예멘의 경우는 오랜 옛날부터 분단되어 있었다)

전후(戰後)에 나타난 이 분단국들의 분단 배경은 각기 다르다. 우선 독일의 경우를 보자. 독일은 1차 대전을 일으켰다가 패전한 뒤 2차 대전을 일으켜 인류에 말할 수 없이 큰 재앙을 주다가 패전했다. 그 결과로 미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소련으로 구성된 연합국은 독일에 징벌을 가하는 동시에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 조치로 독일의 분단을 선택했다.

처음에는 연합국 네 나라가 독일을 4개의 지역으로 분할해서 점령했다. 그러나 1949년에 이르러 미국과 영국 및 프랑스가 각각 점령했던 지역들을 합쳐 독일연방공화국(서독)으로 출범시키고 소련이 점령했던 지역을 독일민주공화국(동독)으로 출범시킴으로써 독일은 둘로 갈라지게 됐다.

여기서 강조돼야 할 점은 독일의 분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연합국에 의해 의도되고 계획되고 집행됐다는 사실이다. 그 과정에 독일 민족 내부에서의 갈등과 대립이 심각하게 개입되지 않았다. 쉽게 말해, 독일 민족 내부에서의 싸움 때문에 독일이 분단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연합국의 정책에 따라 독일이 분단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독일의 분단을 국제형 분단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국제형 분단의 한 변형을 우리는 오스트리아에서도 찾게 된다. 오스트리아는 독일에 합병된 채 독일이 걸었던 길을 그대로 뒤따라 갔기에 독일이 패망하면서 독일이 받은 징벌을 함께 받게 됐다. 그리하여 오스트리아 역시 4대 연합국에 의해 공동 점령됐다.

그러나 연합국은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에 오스트리아 정치인들로 하여금 중앙정부를 수립하도록 허용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는 공동점령을 당했다고 말할 수는 있어도 분단을 당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오

스트리아의 공동점령은 분명히 국제정치의 산물이었으며 국제형 분단에 유사한 것이었다고 하겠다.

여기서 반드시 상기돼야 할 점은 국제형 분단의 경우에는 분단된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가 안정성을 지녔다는 사실이다. 그들 사이에 내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독일의 경우, 동서독 사이에는 무력충돌도 없었고 전쟁도 없었으며, 오스트리아의 경우, 연합국의 공동점령이 끝난 뒤에 어떠한 형태의 내란도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다.

○ 내쟁형 분단으로서의 베트남과 중국의 분단

이어 베트남과 중국의 경우를 보도록 하자. 이 두 나라는 모두 민족 내부에서의 갈등과 전쟁의 결과로 분단됐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는, 프랑스 식민주의 세력에 맞서 싸운 베트남독립동맹(월맹)이 2차 대전이 끝나면서 북부의 중심지 하노이를 중심으로 베트남 민주공화국(북베트남)을 세워 베트남 전체의 통일을 이룩하려고 하자 이것에 반대하는 세력이 남부의 중심지 사이공에 베트남공화국(남베트남)을 세웠으며, 그 연장선 위에서 내전에 돌입했다. 항불(抗佛) 독립운동의 지도자였던 공산주의자 호志明(胡志明)이 이끈 북베트남은 남베트남을 외세에 야합한 반민족주의 세력으로 단정하고 남베트남을 자신의 통치 아래 포함시키려고 했으며, 남베트남은 프랑스의 보호 아래, 자신의 생존을 유지하고자 북베트남에 대항했던 것이다.

그러나 북베트남은 1954년에 우선 프랑스군을 패퇴시켰다. 그리고 그 기세로 남베트남을 '해방'하려고 했다. 이 시점에 열강은 제네바 회담을 열었다. 그리고 북위 17도선을 휴전선으로 삼아 남과 북 사이의 내전을 정지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베트남의 분단은 기본적으로 내쟁형(內爭型) 분단이었다. 마지막 단계에서 열강이 개입해 휴전선을 확정지었다고 해도, 그러나 그 확정도 내쟁의 결과를 인정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중국의 경우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차지한 대륙이 중화민국이 차지한 섬 대만에 비해 너무 크기 때문에 '불균형 분단'이라고 불린다. 그런데 이

경우 역시 내쟁의 산물이다. 중국공산당과 중국국민당 사이의 이념적 대결이 2차 대전이 끝난 뒤 마침내 국공(國共) 내전으로 확대됐고, 이 내전에서 승리한 중국공산당이 대륙을 차지했으며 패배한 중국국민당이 대만으로 쫓겨간 것이다.

여기서 반드시 상기돼야 할 점은 내쟁형 분단의 경우에는 분단된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가 불안정성을 지녔다는 사실이다. 베트남의 경우, 제네바 회담이 휴전선으로 북위 17도선을 확정 한 뒤에도 남과 북 사이에 내전이 계속됐으며, 중국의 경우, 때때로 양안(兩岸) 사이에 포격전이 계속됐고 심지어 군사적 대결로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던 것이다.

이제까지 우리는 내쟁형 분단국으로 통일 이전의 베트남과 중국을 살펴 보았다. 다음에는 분단국은 아니지만 폭력적 분리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영국의 내쟁을 살펴기로 한다.

오늘날의 영국은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그리고 북(北)아일랜드의 네 지역이 통합된 기초 위에서 성립되어 있다. 그래서 나라 이름 자체가 '통합 왕국' (the United Kingdom)이다.

그런데 북아일랜드를 통합할 때 북아일랜드 사람들의 강력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무력으로써 제압함으로써 여러 차례의 대규모 유혈사태를 동반했다. 그 결과 북아일랜드 사람들 가운데 일부 세력은 아일랜드공화국군(IRA)을 조직하고 폭력으로써 영국 정부에 대항하며 북아일랜드의 분리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영국은 부분적으로 내쟁을 안고 있는 셈이다. '내쟁형 통합' 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 국제형 분단과 내쟁형 분단의 복합으로서의 한반도의 분단

그러면 한반도의 분단은 어느 경우에 속하는가? 결론부터 말해, 한반도의 분단은 국제형과 내쟁형의 복합으로, 이 점에 한반도 통일 문제의 복잡성이 있다. 이 사실을 아래에서 좀더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한반도는 1945년 8월 15일에 일제로부터 해방되면서 곧바로 분단됐다. 연합국은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그 이북을 소련군이 점령하도록 하고

그 이남을 미군이 점령하도록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 결정 과정에 우리 거래는 전혀 참여한 일이 없다.

그러면 연합국은 왜 한반도를 그렇게 분할하기로 결정했는가? 독일은 전쟁을 도발했던 죄로 분단이라는 벌을 받았는데, 우리 거래는 전쟁을 일으키기는커녕 오히려 또하나의 전쟁 도발국가인 일본의 침략을 받아 식민지로 전락했던 터이니 분단이라는 벌을 받을 처지가 아니지 않겠는가? 그런데도 연합국은 왜 우리 거래를 억울하게도 두쪽으로 나눴는가?

이 중요한 물음에 대한 해답은 여러 측면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제한된 지면을 통해 간단히 설명한다면, 역시 동북아시아에서 차지하는 한반도의 전략적 위치가 해답의 실마리라고 하겠다. 미국, 중국, 소련, 일본 등 열강의 이해관계가 수렴되는 이 지역을 어느 한 나라가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막고 열강 사이에 세력균형이 취해지도록 하려면 한반도를 미국과 소련이 분할 통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계산했던 것이다.

이 무렵 국제정치의 판도를 결정한 것은 미국과 소련 두 나라였다. 특히 두 나라는 일본을 상대로 하는 태평양전쟁에 공동 참전함으로써 이 지역 문제에 대해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그러한 배경에서 한반도의 분할 점령자로 두 나라가 지목됐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한반도의 분단은 국제형 분단이라고 하겠다. 한민족 사이의 내쟁 때문에 분단된 것이 아니라 국제적 권력 정치의 희생양이 되어 분단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분단된 한반도가 1948년에 2개 국가 체제로 굳어지게 된 데는 열강의 권력 정치라는 국제적 요소에 한민족 안에서의 심각한 이념 대결이라는 내쟁적 요소가 가미됐다. 소련군 점령 아래서의 북한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이 우익 민족주의자들을 제거하는 가운데 이른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으로 약칭한다)이라는 소련의 위성국을 만들어냈고, 미군 점령 아래서의 남한에서는 유혈사태를 동반한 좌우의 투쟁이 전개된 가운데 친미적 우익 주도의 대한민국(이하 남한 또는 한국으로 약칭한다)이 수립됐던 것이다.

한마디로 미·소 냉전에 민족 내부의 좌우 투쟁이 겹쳐진 가운데 '남

북 대결 국가 체제'가 성립됐다고 하겠다. 이 점 때문에 한반도의 분단은 앞에서 이미 지적했듯 국제형 분단과 내쟁형 분단의 복합형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한반도의 분단이 국제형 분단과 내쟁형 분단의 복합형이라는 사실은 1950년에 시작되어 37개월 동안 계속된 6·25 한국동란에 의해 더욱 명백해졌다. 우선 6·25 동란이 일어난 배경을 보면 소련과 중국 및 북한 3자 사이의 공모가 주된 역할을 수행했음을 알게 되며 이 점에서 그 전쟁의 국제적 성격을 확인하게 된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남북한 사이에 진행되던 내쟁이 북한의 전면 남침을 계기로 전쟁으로 확대됐음을 알게 되며 이 점에서 그 전쟁의 내쟁적 성격을 확인하게 된다.

전쟁이 일어나자 미국을 비롯한 서방 16개국은 국제공산주의 세력의 남침과 공산화 통일 시도로부터 대한민국을 구출하려는 의지에서 국제연합의 이름 아래 개입했다. 다른 한편으로 국제연합군의 반격으로 붕괴의 위기에 직면한 북한을 구출하고자 중국이 개입했다. 이로써 이 전쟁은 본격적인 국제전으로 확대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37개월에 걸쳤던 6·25 동란을 통해 남북 사이의 내쟁적 성격 역시 더욱 굳어졌다. 이러한 내쟁적 성격은 1953년에 휴전협정이 성립된 뒤에도 계속되어 오늘날까지도 남북은 극심한 상호 적대감과 불신감 속에 살고 있다. 달리 표현해, 한반도의 분단은 불안정성을 보여 온 것인데, 이러한 상황은 지난날의 분단 독일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것이었고 분단 베트남에서는 때때로 나타났던 것이었다.

분단국가들은 각각 어떻게 분단을 해소했는가?

분단국가들은 각각 어떻게 분단을 해소했거나 해소하려고 하고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부터 우리는 우리 겨레의 통일 방향과 방안에 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국제형 분단의 경우는 국제정치의 변화가 매우 중요했다

우선 독일에서 분단이 해소되고 통일이 성취된 과정을 살펴도록 하자. 우리나라에서는 통일 문제가 나오면 으레 독일의 경우에 대비해 말하기 때문에 더욱 독일의 경우를 우선적으로 살피게 된다.

분단된 독일에서 1990년에 통일이 현실로 나타난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요소는 국제정치의 커다란 변화였다. 우리 모두의 기억에 새롭듯, 1989년에 냉전의 상징과도 같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이 역사적 사건은 그 동안 진행되어 왔던 동서 양대 진영 사이의 접근과 화해를 더욱 촉진시켰을 뿐만 아니라 동방 진영의 이념적 기둥인 공산주의의 붕괴를 재촉했다. 실제로 이 사건을 계기로 우선 동유럽의 공산정권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졌고, 그 연장선 위에서 1991년 12월에 '공산주의의 종주국'이라고 흔히 말해지던 소련이 해체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국제정치의 격변은 독일의 분단 상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쉽게 말해, 독일을 분단시켰던 주된 요인이던 국제적 권력정치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되었음을 의미했다. 실제로 소련의 보호를 받아야 겨우 국가적 존재를 유지시킬 수 있었던 동독은 소련이 더 이상 보호를 베풀 수 없게되자 그대로 무너지고 말았다. 그 결과 동서독은 하나가 될 수 있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한 가지 가상(假想)을 놓고 토론해 볼 만 하다. 그것은 "만일 동서독 사이에 내쟁이 심각했다면 국제정치의 환경이 크게 바뀌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동서독이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라는 가상이다.

이 물음에 대해 필자는 부정적으로 대답하게 된다. 만일 동서독 사이에 심각한 내쟁이 개입되어 있었다면 아무리 국제정치에서 격변이 일어났다고 해도 동서독이 그렇게 쉽게 통일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정반대로 동서독 사이에는 수십년에 걸쳐 교류와 협력이 확대되어 왔다. 특히 1970년대 초에 동서독 기본관계 협정이 체결되고 동서독의 국제연합 동시가입이 실현된 뒤 동서독 사이의 교류와 협력은 여러 방면에서 활발히

진행됐던 것이다.

말하자면 동서독이 평화롭게 통일될 수 있는 내적 여건은 충분히 성숙되어 있었다. 문제의 핵심은 국제적 여건이었다. 그런데 통일을 결정적으로 방해하던 강대국 권력정치가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되자 동서독의 평화통일은 비교적 쉽게 성취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대목에서 필자가 꼭 상기시키고 싶은 것은 독일의 통일이 세상에서 흔히 말하듯 흡수통일 이라기보다는 합류통일이었다는 사실이다. 서독이 동독을 흡수한 것이라기보다는 동독이 서독으로 합류해 들어갔고 서독은 그 합류를 수용했던 것이다.

국제형의 경우엔 국제적 환경이 문제 해결의 1차적 요인이라는 시각은 오스트리아의 경우에서도 타당함이 입증됐다. 오스트리아를 공동점령했던 4대 연합국이 1955년에 이르러 오스트리아를 중립화한다는 조건 아래 모두 자국의 군대를 철수시키기로 합의함에 따라 오스트리아는 외세의 공동점령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 내쟁형 분단의 경우는 민족내부의 역학관계가 가장 중요했다

그러면 내쟁형 분단의 경우에는 어떠했는가? 우선 베트남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하면, 이 나라의 통일은 국제정치의 역학관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민족내부의 역학관계에 의해 결정됐다.

앞에서 설명했듯 내쟁으로 출발한 베트남의 분단은 1954년의 제네바 회담을 통해 국제적으로 공인됐다. 이것은 열강이 국제적 공인을 통해 베트남 분단을 고정화 또는 안정화시키려고 했음을 의미했다.

그러나 남북은 모두 분단을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북베트남은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남베트남을 병합하려고 했다. 이로써 남북 사이의 내쟁은 계속됐으며 마침내 1975년에 이르러 북베트남은 남베트남을 군사적으로 점령하고 베트남의 통일을 성취할 수 있었다. 그것을 어떠한 외세도, 국제정치의 힘도 막을 수 없었다.

이어 중국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앞에서 설명했듯 내쟁으로 출발한

중국의 분단은 그 뒤에도 국제적 해결의 가능성을 완전히 봉쇄한 채 계속해서 내쟁으로 치달렸다. 대륙과 섬 모두 분단의 현실을 인정하기를 거부한 채 '하나의 중국' 론을 고수해 왔으며 각각 자신이 중국 전체를 대표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러한 큰 틀 안에서, 중국과 대만은 각각 '비폭력적' 통일 방안을 제시해 왔다. 중국의 '1개 국가 2개 체제론', 그리고 대만의 '1개 국가 다(多) 체제론'이 그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대만 내부에서는 대만 사람들을 중심으로 대만 독립론이 제기되고 있으나, 중국정부는 물론 대만 정부도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대만독립론이 더 강력하게 조직적으로 현실화될 때는 무력을 써서라도 대만을 병합할 것임을 공개적으로 밝혀 왔다.

그러면 중국의 분단은 어떻게 해소될 것인가? 그것은 열강의 어떤 국제적 힘이나 합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중국 민족내부의 힘의 관계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말하자면 합의에 의해서 통일이 가능할 수도 있고 무력에 의해서 통일이 가능할 수도 있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에 내쟁은 어떻게 매듭지어질 것인가? 북아일랜드공화국의 무력행사 앞에 영국 정부가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양자 사이에 대화를 통해 어떤 합의에 도달할 것인가? 그것 역시 양자 사이의 힘의 관계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 한반도의 통일은 국제적 여건과 민족 내부적 여건의 동시적 성숙 속에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국제형 분단이 해소된 과정과 내쟁형 분단이 해소된 과정을 살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한반도의 통일문제와 관련해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대답하기에 앞서 우리는 한반도의 분단이 국제형 분단과 내쟁형 분단의 복합형임을 다시 떠올릴 필요가 있다. 이것은 결국 한반도의 통일이 독일처럼 1차적으로 국제정치의 역학관계 속에서 찾아지는 것도 아니고 베트남처럼 1차적으로 민족 내부의 역학관계 속에서 찾아지는 것

도 아니라는 점, 오히려 국제정치의 역학관계와 민족내부의 역학관계가 동시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찾아지는 것임을 말해 준다. 이 점을 아래에서 좀더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지난 날, 한반도에 이해가 걸려 있는 강대국들은 자신들 사이의 어떤 합의를 통해 한반도의 분단을 해소시키고 통일을 실현시키려고 했다. 1954년의 제네바 회담이 그 한 보기였다. 또 1972년에 미국의 닉슨(Richard Nixon) 대통령과 중국의 주은래(周恩來) 수상이 상해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은 남북한 사이의 교류와 협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몇 가지 원칙들을 제시했다. 국제연합은 국제연합대로 수십 번이나 한반도의 통일을 실현시키기 위한 계획들을 채택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한반도의 통일문제에 돌파구를 열지 못했다. 왜냐하면 남북한 사이에는 내쟁성(內爭性)이 너무 강해, 국제적 영향력은 늘 한계에 부딪혔던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남북 사이에 내쟁이 해소되어 합의가 성립되기만 하면 곧바로 통일로 갈 수 있느냐 하면 꼭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주변 열강이 한반도의 현상 유지를 지원하는 한, 남북 사이의 합의만으로는 통일이라는 현상 변경을 실현시키기 어려운 것이 한반도의 실정이다.

그 점은 특히 국제냉전의 시대에 그러했다. 남쪽이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서방 진영에, 북쪽이 소련을 정점으로 하는 동방 진영에 각각 묶여 있던 시기에 남과 북은 독자적 행동반경을 크게 제약당했던 것이다.

이렇게 두 개의 상황을 함께 고려할 때 결국 우리는 다음과 같은 평범한 진리에 도달하게 된다. 그것은 남북대화를 진진시켜 내쟁성을 약화시키고 아울러 열강으로 하여금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하게끔 유도할 때 통일의 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여기서 꼭 한 가지 토론포여야 할 점이 있다. 한반도 문제에 관해 국제성의 영향력이 더 크냐 또는 내쟁성의 영향력이 더 크냐의 논쟁이다. 어떤 전문가들은 내쟁성의 영향력보다 국제성 영향력이 더 크다고 한 것이고, 어떤 전문가들은 국제성의 영향력보다 내쟁성의 영향력이 더 크다고 한 것이다. 그리고 어느 쪽이 더 크다고 보느냐에 따라 해법 역시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국제성의 영향력보다 내쟁성의 영향력이 더 커지고 있다고 본다. 남한과 북한 모두 초기에는 각각 자신의 후원국의 영향을 압도적으로 받고 있었으며, 또 그 무렵의 국제정치는 미·소 양극체제 아래 움직였기에 미국과 소련은 자신의 영향 아래 있던 나라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뒤 남북한 모두 자신의 국력을 키우면서 자신의 후원국에 대해 상당한 발언권을 행사하게 됐고 때로는 일정한 수준에서 거부권도 행사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한반도 전체에 대한 국제정치의 영향력은 냉전이 절정에 이르렀던 시기에 비한다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됐으며, 그 결과 남북한 사이의 내쟁성은 여전히 꺼지지 않게 된 것이다. 다만 최근에 남북한 모두가 경제적 위기에 빠지게 되면서 국제사회의 영향력이 다시 커지게 됐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처럼 남북한 사이에는 내쟁성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 한반도 문제와 독일 문제의 큰 차이가 된다. 이렇게 볼 때, 통일을 향한 우리의 노력은 내쟁성의 완화에 쏟아져야 할 것이다.

남북한은 각각 통일을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해 왔나?

국제형 분단과 내쟁형 분단의 복합으로서의 한반도 분단을 해소하기 위해 남과 북은 각각 어떤 정책을 세워 추진해 왔나? 지난 반세기의 분단사를 몇 개의 시기로 나눠 살펴기로 한다.

○ 국제적 해결 방식과 민족내부적 해결 방식이 동시에 추구됐던 시기 (미·소 분할점령의 시기)

1945년 8월 15일에 한반도가 일본 제국주의의 사슬로부터 해방되면서 연합국의 결정에 따라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그 이북은 소련군이 점령하고 그 이남은 미군이 점령했다는 사실은 제1장에서 이미 지적했다. 이 시점으로부터 약 3년 동안 한반도는 미·소 양군에 의한 분할점령 통치의 시기에 들어갔다.

그렇다고 해서 연합국이 한반도에 대한 분할점령 통치를 무한정으로 계속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연합국은 1945년 12월에 모스크바에서 외무장관 회담을 열고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하나의 방식에 합의했다. 그것은 단순화시켜 말한다면 국제적으로는 미·소의 합의를,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좌우의 합의를 동시에 성사시켜 그 바탕 위에서 통일정부를 세우겠다는 것이었다. 이것이 4개항으로 구성된 '코리아에 관한 모스크바 의정서'의 뼈대였다.

이 문서에 기초해 1946년에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렸다. 이 미·소 공동위원회는 한반도 안의 좌익 정당들 및 우익 정당들 모두와 협의해 그들 모두가 동의하고 참여하는 임시통일정부를 세우도록 계획되어 있었다.

순전히 이론적으로만 보면 이러한 내용의 모스크바 방식은 한반도의 분단을 해소시키기 위해 합리적인 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거듭 말하거니와, 한반도의 분단은 국제적 분단이면서 동시에 내쟁적 분단이기에 국제적 해결과 민족내부적 해결을 병행해 추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스크바 방식은 현실성이 없음이 드러났다. 우선 미국과 소련이 아무것도 합의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2차대전은 끝난 뒤 두 나라는 이념과 체제에서 이해가 엇갈려 냉진체제를 구축하게 됐던 것이다.

한민족 내부에서도 아무런 합의가 성립될 수 없었다. 좌우익 사이에 이념적 대결이 극심했기 때문이었다. 그래도 미국과 소련은 1947년에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를 열어 보았다. 결과는 똑같았다. 두 나라의 냉진은 더욱 심해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 한민족 내부에서의 좌우익 대립

역시 극심해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결국 모스크바 방식의 파산을 의미했다. 여기서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국제연합으로 가져갔다. 국제연합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자는 뜻이었다. 그러나 소련은 이것에 반대했다. 소련은 여전히 모스크바 방식을 통한 해결을 주장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소련은 그 사이 자신의 점령 지역인 북한에 소련군 대위 출신의 김일성을 우두머리로 하는 소비에트 정권을 세워가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미국은 마지막 수단으로 남한에서만이라도 국제연합을 통해 정부를 세워야겠다고 결정했다. 그 결과 국제연합한국임시위원단의 참관 아래 1948년 5월 10일에 남한에서 제헌의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됐으며, 이 총선거에 바탕을 두고 1948년 8월 15일에 항일 독립운동가 이승만(李承晩)을 대통령으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졌다. 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할 것임을 다짐했다.

국제연합 3차 총회는 1948년 12월에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했다. 이것에 근거해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연합이 자신을 한반도 전체에 걸친 유일 합법정부로 승인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앞서 남한에서는 김구(金九)와 김규식(金奎植)을 중심으로 하는 민족주의자들이 남북협상을 제의했다. 말하자면, 민족내부적 해결 방식을 추진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 제의를 북한의 김일성이 받아들임에 따라 1948년 4월 하순에 평양에서 남북회담이 열렸다.

그러나 이 회담은 김구와 김규식의 본심과는 어긋나게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각본에 따라 진행됐을 뿐이어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남북협상이 될 수 없었다. 민족 내부의 이해충돌과 갈등이, 이 회담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남북협상으로 진전되고 승화되는 것을 가로막았던 것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국제정치가 미·소 양극체제 아래 놓이게 됨으로써 그 하위체제에 속한 남과 북의 행동반경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었다는 사실일 것이다. 비록 말해, 남과 북이 설령 어떤 합의에 도달했다고 해도 그 합의가 미국과 소련의 이익에 어긋나는 것이었다면 좌절시켰을 것이다.

그 뒤 북한은 이미 내부적으로 마련된 계획표에 따라 친소 공산주의

정권을 세워나갔다. 그리하여 1948년 9월 9일에 소련군 대위 출신의 김일성(金日成)을 수상으로 하는 이른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수립을 선언했다.

이 정부에 대해서는 승인 문제와 관련해 국제연합으로부터 아무런 조처가 취해지지 않았다. 이것은 물론 국제연합이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한 것과 크게 대조됐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월등히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 것이었다. 그로 인해 대한민국은 한반도 통일문제의 국제적 해결 방식에 더욱 기울어지게 되었다. 반면에 북한은 한반도 문제의 민족내부적 해결 방식에 더욱 기울어지게 되었다.

○ 민족 내쟁이 국제 냉전에 겹쳐 전쟁으로 확대됐던 시기 (1948년 8월 15일~1953년 7월 27일)

남과 북에서 별개의 국가가 각각 세워진 뒤 그들은 상대방에 대해 적대적인 정책을 세웠다. 남의 대한민국은 북의 이른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인정하지 않은 채 북을 포함하는 한반도 전체를 자신의 영토로 여겼다. 반면에 북의 이른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남의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은 채 한반도 전체를 자신의 영토로 여겼다. 만하하면, 남과 북은 모두 한반도에 2개의 국가가 실존한다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의 코리아' 만이 존재하며 오로지 자신만이 '하나의 코리아' 를 대표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러한 전제 아래 남과 북은 각각 자신의 통일정책을 세웠다. 구체적으로 말해, 남과 북은 각각 상대방을 자신의 체제 안으로 병합시키는 것을 통일로 여겨 남은 북진통일을, 북은 '국통의 완정(完正)' 이라는 이름 아래서의 '남조선 해방' 을 추구했다. 북은 자신을 '민주 기지' 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자신이 남에 사회주의 혁명을 수출하는 기지임을 자임한다는 뜻이었다. 남과 북의 이러한 노선은 남의 통일정책과 북의 통일정책이 전면적으로 충돌하고 있음을 의미했으며, 미·소 양군의 분할 점령 아래 드러났던 민족 내쟁성이 더욱 거세졌음을 의미했다.

따라서 남과 북은 통일정책에서 중요한 기본적인 차이가 있었다. 우선

남의 경우, 국제연합을 통한 해결 방식을 제의했다. 남에서는 이미 국제연합한국임시위원단의 참관 아래 총선거가 실시돼 대한민국이 수립되었으므로, 북에서도 뒤늦게나마 국제연합한국임시위원단의 참관 아래 총선거를 실시해 국회의원을 뽑아 대한민국 국회로 보내면 그것으로 통일은 성취된다는 논리를 제시한 것이다.

북은 이 제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반도의 통일문제는 전적으로 민족 내부의 문제이므로 국제연합이 관여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논리였다.

이상에서 남과 북이 각각 취한 통일정책을 살폈거니와 그러면 남이 제시한 국제연합을 통한 통일 방식은 국제적 해결을 모색한 통일 방식이었는가? 표면적으로는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다. 만일 이 방안에 미국과 소련이 진정으로 합의해 북한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면 이 방안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성취시켰을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볼 때 그 통일 방식은 처음부터 실천이 불가능했다. 우선 그때까지만 해도 북한에 대해 강력한 영향을 끼치던 소련이 반대했고 또 당사자인 북한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남은 공식적으로 이 통일정책을 고수했다.

이렇게 볼 때, 한반도 상황은 국제냉전에 민족내쟁이 겹쳐진 최악의 상황이었다. 세계적 차원에서 전개되던 미국과 소련 사이의 냉전은 한반도 차원에서는 남과 북에 대한 지원의 형태로 나타났으며, 남과 북은 서로 한 걸음도 물러나지 않는 대결의 자세를 보였던 것이다.

이것은 1950년 6월 25일에 북한의 남침으로 비롯된 한국전쟁으로 폭발했다. 북한의 남침에 대해 한국은 군사적으로 전면 대항하면서, 이 기회에 북진통일을 성취하고자 했다. 말하자면 이 시기에 남과 북은 노골적으로 무력에 의한 상대방의 정복과 자신의 체제로의 흡수통합을 시도했던 것이다.

그러나 미·소 양극체제가 지배적인 국제정치의 역학관계는 한반도가 어느 한쪽에 의해 통합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남한이 북한의 기습적 전면 남침으로 붕괴하게 되자 미국이 국제연합의 깃발아래 군사적으로 개입해 막아주고, 반면에 국제연합군의 반격이 성공해 북한이 붕괴하게 되자 소련을 대신해 중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해 막아준 것이 그 점을 증명

해 주었다. 그리하여 한국전쟁은 결국 1953년 7월 27일에 체결된 정전협정의 형태로 마무리됐다

정전협정은 국제연합군을 일방으로 하고 북한군 및 중국군을 타방으로 하는 3자 사이의 협정이었다. 대한민국은 휴전은 한반도의 통일을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휴전에 반대했으며 그 논리의 연장선 위에서 정전협정에 서명하기를 거부했다.

정전협정은 앞으로 한반도 문제에 관계된 나라들 사이에 정치회담을 열어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규정했다. 이 평화협정은 물론 정전협정을 대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한반도 문제가 국제적 문제이며 동시에 남북 사이의 문제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1954년 제네바에서 남북한도 개별적으로 참석한 국제적 다자(多者)정치회담이 열렸다. 그러나 서방진영과 공산진영 사이에서도, 그리고 남과 북 사이에서도 아무런 합의가 성립될 수 없었다. 냉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다.

○ 국제연합화 대 민족내부화의 시기

(휴전의 성립으로부터 7·4 남북공동성명의 발표 이전까지)

한반도에 정전협정이 맺어진 직후에 대한민국은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었다. 이로써 두 나라는 군사동맹 관계에 들어간 것이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북한의 남침에 대해 한국과 미국이 군사적으로 공동 대처할 것임을 다짐했고 이로써 이 조약은 북한의 남침 가능성을 견제하고 있다. 반면에 이 조약은 남한의 북침 가능성에 대해서도 견제하고 있다.

어떤 전문가들은 정전협정과 한·미 상호방위조약 두 가지로써 한반도에 동란체제(動亂體制)가 성립됐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이 동란체제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연합의 개입이 제도화된 것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는 데 이바지했다. 6·25 동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1950년 10월에 국제연합은 국제연합한국통일부흥위원단(언커크)을 창설해 한국에 상

주시키면서 한반도의 상황과 통일문제에 관해 관찰하게 하고 그 결과를 매년 가을에 열리는 국제연합 총회에 보고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상황은 우선 북에게 통일문제에 대해 그 이전에 비해 덜 전투적인 입장을 취하게 만들었다. 남침과 북침 모두가 불가능해진 상황이 조성됐음을 인식한 북한은 자신의 모든 힘을 1차적으로 경제복구와 정권안정에 쏟게 됐으며, 통일의 과제는 우선순위에서 부차적인 수준으로 낮췄다.

그렇다고 해서 통일문제를 가볍게만 다루지는 않았다. 북한은 동란체제의 결과로 남한에 상주하게 된 미군과 언커크의 철수를 끊임없이 요구했다. 만일 그 요구가 실현된다면 남한의 외교적 및 군사적 방위체제는 훨씬 약화된다고 북한은 계산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자신의 요구를 한반도 통일문제는 민족 내부 문제라는 이름아래 합리화했다. 말하자면 북한은 한반도 통일문제의 민족내부화에 주력했다고 하겠다.

그러한 배경에서 북한은 남북대화, 남북 상호 감군과 군축, 남북 경제 및 문화 교류 등을 제의했다. 특히 1960년에 남한에서 4·19 시민혁명을 계기로 제1공화정이 붕괴하고 장면(張勉) 국무총리가 이끈 제2공화정이 출범하자 북한은 남북연방제를 통한 통일을 제의했다.

남한의 입장은 전혀 달랐다. 대한민국은 우선 한국판 할슈타인 원칙(the Hallstein doctrine)을 기둥으로 삼았다. 서독의 외무차관 할슈타인은 서독이 독일 전체의 유일 합법 정부이며 독일 전체를 단독으로 대표한다는 이른바 유일 대표권을 주장하고 이 논리에 근거해 동독의 존재를 부인함과 아울러 동독과 국교를 맺는 나라와는, 진승국인 소련을 제외하고는, 전면 단교했다. 이것을 할슈타인 원칙이라고 불렀는데, 한국 역시 북한에 대해 유일 대표권을 내세우면서 북한의 존재를 부인한 것이다.

이것은 한국이 북한이 제의한 모든 대화와 협상을 거부하는 행동으로 나타났다. 그 대신에 한국은 국제연합을 한반도 통일의 유일한 통로로 지정했다. 국제연합의 참관 아래 남북한이 도착 인구비례에 입각해 총선거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통일 국회를 구성하며 그 통일 국회를 통해 통일 정부를 세우자는 뜻이었다. 이 제의는 결국 한반도 통일문제를 국제연합화 또는 국제화하려는 것이었다.

이상에서 살폈듯, 남의 입장과 북의 입장 사이에는 접합점이 형성될 수 없었다. 한반도 통일 문제를 남은 국제화하려 하면서 민족내부화에 전면 반대하고 북은 국제화에 전면 반대하면서 민족내부화쪽으로 물고 가려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격한 차이의 뿌리에는 남과 북 사이의 깊은 불신감과 적대감, 말하자면 본질적인 내쟁성이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뿌리 깊은 내쟁성은 1960년대 후반에 극명하게 드러났다. 김일성은 이른바 조선혁명문을 앞세워 남한에 대해 매우 호전적인 정책을 취했으며 그것은 마침내 1968년의 청와대 공비 기습사건과 미함 푸에블로호 나포사건 및 무장개입라 동해안 침투사건, 그리고 1969년의 미 해군 정찰기 격추 사건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국군 현대화의 적극 추진 및 향토방위군의 조직 등 강경한 군사정책으로 맞섰다. 확실히 1960년대 후반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높아졌다.

○ 한반도 통일문제의 탈(脫) 국제화로부터 다시 국제화로 (1970년대 초부터 1980년대 말까지)

이러한 상황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크게 바뀌었다. 국제정치의 상위체제인 미·소 냉전체제가 긴장완화(테탕트)로 돌아서고 미·중 관계가 화해의 방향으로 개선되자 그것은 하위체제인 남북한 관계에도 즉각적이면서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이다.

그리하여 남과 북은 1971년 여름과 1972년 여름 사이에 공식적 차원에서 대화를 개시했다. 우선 남북 적십자회담을 몇 차례 열면서 관계개선을 시도했으며 그러한 분위기를 활용해 남북 권력기관들 사이에 비공개 회담을 가짐으로써 마침내 1972년 7월 4일에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 공동성명의 핵심은 한반도 통일문제를 국제연합의 토의에서 피어내고 남북 사이의 직접적 협상과제로 설정시킨다는 데 있었다. 말하자면, 한반도 통일문제를 탈국제화시키고 민족내부화시킨다는 것이었다. 그것을 이 문서에서는 '자주의 원칙'이라고 불렀다.

이것에 기초해 남과 북은 남북조절위원회를 발족시켰다. 남북조절위

원회는 순조롭게 운영되기만 한다면 사실상 '남북한 각료회의'의 성격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남북 사이의 내쟁은 여전히 뿌리 깊었으며 몇 차례의 회담을 통해, 그것도 민족의 자발적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강대국 관계의 변화에 밀린 결과에 의해서 열린 회담을 통해 쉽게 극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북한은 실제로 1973년 8월에 남한의 정치적 상황을 빌미삼아 남북 회담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그리하여 남북관계는 갱신했으며, 동시에 남과 북 사이에는 상대방에 대한 비방이 다시 시작됐다.

그 뒤 북한의 태도에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 남한과는 대화할 수 없고 미국과 직접 대화하겠다는 것이었다. 특히 북한과 미국 사이의 쌍무적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협정을 맺고 그 평화협정으로써 정진협정을 대체하자고 주장했다. 1974년 3월에 내놓은 이 제의에서 북한은 남한이 이 협상 과정과 협정 체결에 참가할 자격이 없다고까지 주장했다.

남한은 평화협정이 1차적으로 분단 당사자인 남북한 사이에 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의 제의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미국은 남한의 입장을 뒷받침했다.

북한이 겨냥한 것은 우선 주한 미군의 철수였다. 주한 미군이 철수하기만 하면 북한은 자신의 이른바 남조선 해방 전략진술에 입각해 남한의 공산화를 성취할 수 있다고 계산한 것이다.

북한이 겨냥한 것은 이어 한국 정부의 격하였다. 한국 정부를 미국의 종속 국가 정도로 격하시켜, "그러므로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나 다름없는 남조선을 우리가 해방해야 한다"는 논리를 확산시키고자 한 것이다.

그런 가운데 1975년에 북베트남은 마침내 남베트남을 무력으로 굴복시키고 베트남 전체의 공산화 통일을 실현했다. 내쟁형 분단이 결국 내쟁을 통해 해소된 것이었다.

한반도 상황을 내쟁적 상황으로 유도하려 했던 북한에게 베트남의 내쟁적 해결은 커다란 격려였다. 그리하여 김일성은 베트남 방식의 한반도 적용을 염두에 두고 중국을 방문해 지원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그는 소련도 방문하려고 했으나 거절당했다. 그 무렵 미국과의 긴장완화 및 관계개선을 추구하던 중국과 소련은 모두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

중국적으로 한반도에서 미국과 군사적으로 대결하게 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도 북한은 한반도 상황의 내쟁형으로의 전환을 포기하지 않았다. 1976년 여름에 북한군은 비무장지대에서 미군을 도끼로 때려죽인 이른바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을 저질러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였다. 이 사건은 김일성의 맏아들로 김일성의 후계자 수업을 받던 김정일(金正日)이 주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뒷날 공개된 자료들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북한에 대해 군사적 보복 조치를 취하고자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북한은 곧바로 김일성의 유감 표명을 비롯한 몇 가지 저자세 조치를 취했다. 이로써 군사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 사건은 한반도의 내쟁성이 얼마나 높은 가연성(可燃性)을 지녔는가를 증명하기에 충분했다.

이 시점에서 미국은 키신저(Henry Kissinger) 국무장관의 국제연합에서의 연설을 통해 한반도 문제의 '기본적 해결'을 위한 다자(多者)회담안을 내놓았다. 남북한 당사자에 미국 및 중국을 비롯한 유관국(有關國)이 함께 참가해 한반도의 정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키는 합의물이 끌어내지는 것이었다.

이러한 다자회담안과 더불어 남북한에 대한 미·소·중·일 등 주변 4강의 교차승인 구상이 주로 미국 및 일본으로부터 제기됐다. 남한과 국교를 맺고 있는 미국과 일본이 북한하고도 국교를 맺고 북한과 국교를 맺고 있는 소련과 중국이 남한하고도 국교를 맺음으로써 한반도에 2개의 국가가 실존하고 있는 현실을 국제적으로 공인하자는 뜻이었다. 같은 맥락에서 남과 북을 동시에 국제연합에 가입시키자는 구상도 국제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제기됐다.

이러한 국제적 구상들이 실현된다면 남과 북 사이에서도 상대방에 대한 승인이 뒤따를 것이라고 예상됐다. 그렇게 되면 남과 북은 상호 불가침협정을 맺을 수 있게 되고 교류와 협력을 증대시킬 수 있게 돼 내쟁성을 크게 완화시키면서 평화공존 관계로 접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리고 평화공존이 제도화되면 그 바탕 위에서 남북 사이에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이 성취될 것으로 기대됐다.

이상에서 살핀 다자회담 구상, 교차승인 구상, 그리고 국제연합 동시 가입 구상 등은 말하자면 국제적 해결 방식에 민족내부적 해결 방식을 복합시킨 제의였다. 그것들은 또 동서독 관계개선의 모델을 남북한 관계의 개선을 위해 적용해 보자는 발상들이었다.

남한은 이 제의들을 지지했다. 그러나 북한은 거부했다. 북한은 이 제의들이 '2개의 코리아' 논리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은 그러한 분단 논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했다. 북한은 이때부터 '조선은 하나'라는 구호를 내걸었다. 북한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제적 개입을 배제하고자 했던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국제적 구상들은 실현될 수 없었으며 남북관계는 여전히 긴장됐다.

1980년대에 들어서서 북한은 자신의 상표나 다름없는 민족내부적 해결방식을 더욱 강하게 부각시키는 가운데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통일방안'을 제의했다. 1980년 10월에 열린 북한의 조선로동당 6차 대회를 통해 제시된 이 방안의 뿌리는 물론 1960년의 남북연방제에 있다.

북한의 이 제의는 주한 미군 철수와 한·미 상호방위조약 폐기 및 국가보안법 폐지 등 한국 정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진제조건들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제의의 속셈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제의가 갖는 민족자결주의적 호소력은 적지 않았다.

그리하여 한국 정부 역시 민족내부적 해결방식에 대해서도 역점을 두었으며, 그것은 1981년에 남북 정상회담의 개최 제의로 나타났다. 북은 이 제의를 거부했다.

그래도 분단 40주년을 맞은 1985년에 남북 사이에 분단 이후 처음으로 이산가족의 상호 방문과 예술단의 상호 공연이 실현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이었고 남북 관계는 계속해서 경색됐다.

이러한 교착 상태는 1980년대 후반까지 계속됐다. 이것은 다시 강조 하거니와 한반도 문제의 내쟁성이 얼마나 큰가를 말해주는 것이었다.

○ 민족내부적 해결방식으로서의 남북기본합의서 성립 (1988년부터 1993년까지)

1980년대 후반 이후 국제정치의 큰 흐름은 화해와 협력의 방향으로 더욱 빠르게 진전됐다. 1985년에 소련에서 출범한 고르바초프(Mikhail Gorbachev) 정권의 대외정책은 그 흐름을 촉진시켰다. 이 정권은 소련의 대외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와의 화해와 협력을 앞세웠던 것이다. 이로써 이데올로기적 대결은 점점 더 희석됐으며 동서 냉전은 크게 약화됐다.

이러한 흐름은 '냉전의 마지막 외로운 섬'이라고 불리던 한반도에 대해서도 큰 영향을 주었다. 우선 국제사회와의 관련성이 매우 높아진 한국이 국제적 화해와 협력의 흐름에 대해 훨씬 더 유연한 반응을 나타냈다. 그것은 북방정책이란 이름 아래 북한을 포함한 공산권 전반에 대해 화해와 협력을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말해, 한국정부는 1988년 7월 7일의 '대통령 7·7선언'을 통해 북한을 남북관계 역사상 처음으로 '협력의 동반자'라고 부르면서 남북 관계의 본질적 개선을 위해 남과 북이 공식적 수준에서 깊이 있는 대화와 협상에 들어갈 것을 제의했다. 이 선언은 또 한국이 소련 및 중국과 수교할 뜻이 있음을 명시적으로 밝히면서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 수교해도 무방하다는 뜻을 역시 명시적으로 밝혔다.

이 해 여름 서울에서 열린 올림픽에 소련과 동유럽 공산국가들 및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들 거의 모두가 참가함으로써 서울 올림픽은 12년만에 처음으로 동서 양대 진영이 함께 참가한 '완전한 세계 올림픽'이 됐다. 이것은 동서 양대 진영의 화해를 상징했으며 또한 한국의 대외적 위상을 크게 높여 주었다. 반면에 북한은 불참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서울 올림픽 참가를 방해했는데, 이것은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은 통일 문제에 대해 훨씬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다. 우선 이 해 가을에 열린 국제연합 총회에서 한국 정부는 6자 회담안을 제의했다. 분단 당사자인 남북한, 그리고 한반도 주변 4강인 미국,

소련, 중국, 일본 등 6자가 자리를 함께 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한반도의 통일을 협의하자는 것이었다.

이어 이듬해에 한국 정부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제의했다. 남과 북이 직접적 대화와 협상을 통해 현재의 대결 관계를 평화공존 관계로 전환시킨 다음, 남북연합을 이룩하고, 마지막으로 한민족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통일을 실현한다는 구상이었다.

이상에서 살핀 한국 정부의 제의들을 종합해 보면, 한국 정부가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해 국제적 해결방식과 민족내부적 해결 방식을 함께 활용하고자 했음이 드러난다. 그렇게 하면서도 민족내부적 해결 방식에 대해 그 이전의 시기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관심을 쏟았음이 드러난다.

한국 정부의 이러한 제의들을 북한은 거부했다. 북한은 '고려민주연방 공화국 창설 통일 방안' 이외에는 어떠한 통일 방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 무렵인 1989년 후반기에 세계는 하나의 거대한 역사적 사건을 엄청난 충격 속에 목격하게 됐다. 동독 사람들이 공산독재의 산물이며 동서 냉전의 상징이던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린 것이다. 그들은 곧 서독으로 여행하거나 이주했으며 동독 내부에서 민주화 운동을 일으켰다. 이미 겁대 기일이 드러난 동독 공산 정권으로서는 이것을 막을 수 없었다. 용기를 얻은 동독 국민들은 마침내 동독 공산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 총권기했다.

동독 공산 정권이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동독에 주둔하는 소련군이 동독 국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것뿐이었다. 그때까지의 상식으로는 소련이 그렇게 하리라는 것이었다. 동독의 붕괴와 동독의 서독으로의 통합, 곧 서독 주도의 독일 통일을 소련은 바라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고르바초프 정권은 군사적 개입을 자제했다. 스스로 소련의 힘의 한계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한 예상 밖의 결과로 동독 공산 정권은 무너졌다. 동독 국민들은 서독으로 합류해 들어갔으며 서독은 이것을 받아들여 1990년 10월 3일에 역사적인 독일 통일이 평화적으로 성취됐다.

동독의 붕괴와 독일의 통일은 이대울로기적 대결로 상징되었던 냉전

구조의 와해를 의미했다. 실제로 동유럽에서 공산정권들이 연쇄적으로 붕괴되면서 공산주의는 급격히 몰락해 갔다.

이처럼 세계사의 큰 전환이 이뤄지던 1990년에 한국은 마침내 소련과 수교했다. 2년 뒤인 1992년에는 한국은 중국과의 수교마저 실현할 수 있었다. 이것은 한국의 실체를 인정하려 하지 않던 북한에게 큰 타격이었다. 실제로 소련과 중국은 북한에게 한국의 실체를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은 물론 이미 7·7선언에서 다짐했듯 북한의 실체를 인정할 뜻을 나타내고 있었다.

국제적으로 훨씬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 남한은 그 여세를 몰아 남북 총리회담의 개최를 북한에 제의했다. 남한으로서는 고위급 정부 당국자 회담을 통해 우선 남북관계를 안정시키고 이어 남북관계를 탈냉전의 세계적 흐름에 맞춰 화해와 교류 및 협력의 단계로 발전시키는 것이 평화통일의 길을 여는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다행히도 북한은 이 제의에 응했다. 이 무렵 동유럽 공산정권들의 붕괴로 심리적 위축감을 느끼던 북한은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는 것을 진제로 한 남한의 제의에 응하는 것이 자신의 체제 유지에 도움이 되리라고 계산했을 것이다.

분단 이후 처음 성사된 남북 총리회담은 1992년까지 모두 여덟 차례 열렸다. 그 결과 남북의 총리들은 1991년 12월에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했고 1992년 1월에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서명했다. 이 두 개의 문서들은 모두 1992년 2월에 발효됐다.

이 두 개의 문서들은 모두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화해 및 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구체적 실천 계획 등을 민족내부적 합의를 통해 이끈어 났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앞의 문서(이하 남북기본합의서라고 약칭한다)는 7·4 남북 공동성명보다 훨씬 상세하게 긴장완화와 평화통일을 향한 행동 지침들을 밝힘으로써 남북관계의 역사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것이었다.

우선 남북 사이에 상호 불가침이 약속됐다. 또 군비통제와 궁극적인 군비축소가 약속됐으며, 통행·통신·통상의 이른바 3통의 실현을 위한

방법이 합의됐다. 또 정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한 방법이 구체적으로 합의됐다.

이 문서는 1970년대 초에 동서독 사이에 맺어진 기본관계협정을 많이 닮았으며, 이 문서의 합의 사항 그대로 실천된다면 마치 동서독 기본관계협정을 통해 동서독 관계가 교류와 협력이 제도화된 평화공존의 단계로 들어갔듯 남북한 관계 역시 교류와 협력이 제도화된 평화공존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었다. 달리 표현해, 이 문서는 한반도의 통일이 비록 시간은 꽤 걸리겠지만 민족내부적 해결 방식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는 기대를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1991년 가을에 남과 북이 함께 국제연합에 가입하게 된 것도 그러한 기대를 높이는 데 이바지했다. 남북이 국제연합을 통해 교류와 협력을 제도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었다.

○ 제네바 합의와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

그러나 그러한 기대는 환상이었음이 곧 드러났다. 남북 사이의 뿌리 깊은 대결구도가 단지 두 개의 문서가 발표되고, 남북한이 국제연합에 동시 가입함으로써 쉽게 희석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건들이 벌어진 것이다.

그 결정적 계기는 1993년에 마련됐다. 이 해 3월에 북한은 핵확산금지협정(NPT)에서 탈퇴한다고 선언함으로써 세계를 놀라게 했다. 핵무기를 비밀리에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받던 북한이 이 협정에서 탈퇴하겠다는 것은 결국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 사찰을 받지 않고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됐기 때문이었다. 것처럼 위험한 길을 걸으면서도 북한은 한 달 뒤에는 '전민족 대단결 통일을 위한 10대 강령'을 발표하는 등 평화 통일에 관심이 있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미국은 서둘러 북한과 쌍무적 회담을 가졌다. 북한이 남한을 배제시킨 채 미국과 쌍무적 회담을 가진 것은 이것이 사실상 처음이었으며 이것만으로도 북한에게는 적지 않은 소득이었다.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폈듯, 북한은 1974년 이후 남한을 배제시킨 상태에서의 미국과의 쌍무적 회담

개최를 일관되게 제의했던 것인데 이제 19년만에 그 제의가 성사된 셈이었다.

이 회담이 진행되는 가운데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매우 높아졌다. 최근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1994년 상반기에 미국은 북한의 핵 개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선제 공격'을 고려하기도 했다. 이것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다시 한 번 말해주는 것이었다.

다행히 1994년 여름에 미국의 전직 대통령 카터(Jimmy Carter)가 평양을 방문해 김일성과 회담해 대화의 창구를 열었으며, 이것을 계기로 서울과 평양은 남북 정상회담을 그 해 7월 하순에 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1994년 7월 4일에 김일성이 사망함으로써 남북 정상회담은 무산됐다.

그래도 미국과 북한 사이의 회담은 계속돼 이 해 후반기에 제네바에서 마침내 '합의틀'이 마련됐다. 이것은 한국과 미국 및 일본 등이 지원하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세우고 이 기구가 중심이 돼 북한에 경수로를 지어주는 조건으로 북한은 핵 개발을 포기한다는 것, 그리고 미국과 북한은 각각 상대방 수도에 연락대표부를 상주시킨다는 것 등을 규정했다. 실제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는 1997년에 북한에 들어가 경수로 건설 사업을 시작했다.

제네바 합의문은 한반도의 장래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들을 놓고 남한이 배제된 채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공식적으로 맺어진 최초의 외교 문서였다. 그만큼 이 문서가 갖는 의미는 컸다. 실제로 북한은 이 문서를 앞세워 미국과의 쌍무 회담만을 고집하면서 한국과의 공식 대화를 외면해 왔다. 이것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 북한이 남북기본합의서를 벗어나 제네바 합의에 입각해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에 입각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제시했다. 1994년 8월 15일 광복절 49주년을 맞아 발표한 이 통일방안은 3단계 통일방안이다.

첫번째 단계는 '화해·협력의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남과 북은 경쟁과 대결을 지양하고 화해와 협력을 추구한다. 둘째 단계는 '남북연합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남과 북은 통일의 과도체제로서 '남북연합'을 구성

한다. 이 '남북연합'을 형성하는 기구로 '남북연합'의 최고 결정기구인 '남북정상회의' 남과 북의 총리들을 공동의장으로 하고 10명 안팎의 각료들로 구성되는 '남북각료회의' 1백명 안팎 같은 수의 남북 국회의원들로 구성되며 통일헌법을 기초하고 통일절차를 마련하는 '남북평의회' 등을 둔다. 이 '남북연합'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한다. 셋째 단계는 1민족·1국가·1체제·1정부의 통일국가를 수립하는 단계이다. '남북연합'의 '남북평의회'가 마련한 통일헌법과 통일절차에 따라 남북총선거를 민주적으로 실시해 통일국회를 구성하고 그 통일국회를 통해 통일정부를 수립하는 것이다.

북한은 이 제의도 거부했다. 북한은 남한을 배제시킨 채 미국과의 쌍무적 대화만을 고집한 것이다. 이에 맞서 한국은 1996년 4월에 미국과의 공동성명을 통해 4자회담의 개최를 제의했다. 남북한 당사자, 그리고 정전협정에 조인한 미국과 중국 등 4자가 회담을 열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키는 문제를 협의하자는 것이었다.

북한은 처음엔 이 제의에 소극적이었다. 한국을 상대하기 싫다는 뜻에서였다. 그러나 4자회담 제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가 워낙 강한대다가 이 회담에 응해야 미국과 한국 및 다른 서방세계로부터 경제원조를 받을 수 있다는 실리적 타산에서 응하게 됐다. 그리하여 1997년 12월에 마침내 제1차 본회담이 제네바에서 열렸다.

이 회담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북한이 여전히 주한 미군의 철수, 그리고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의 평화협정 체결 등을 고집했기 때문이었다. 제2차 회담은 1998년 3월에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남북 사이의 입장 차이가 커서 4차 회담은 앞으로 상당히 많은 시일을 요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 통일문제의 새로운 변수

북한의 위기 상황

세계적인 화해와 협력의 물결 속에서도 오로지 남북한 관계는 여전히 냉전 구도 속에 갇혀 있다. 그렇게 된 배경에는 1990년대에 들어와 체제 붕괴의 위기에 빠져들게 된 북한의 대내외적 상황도 개입되어 있다. 북한 체제 전반에 대한 남한의 '침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남북교류는 물론, 남북대화 그 자체를 기피하면서 대남 군사력을 강화하는 등, 남북관계를 적대적 공존관계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을 이 장에서 살피기로 하겠다.

● 김정일 정권의 현황

북한의 현황에 대한 분석은 김정일 정권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김정일의 권력은, 그리고 김정일을 징검으로 하는 김정일 정권은 안정되어 있는가 아니면 불안정한가? 북한의 현황과 미래에 관한 핵심적인 관심은 바로 이 물음에 집중될 것이다.

이 물음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조사되어야 할 분야는 김정일의 건강이다. 한때 세상의 거의 모든 중요한 질병들이 그의 이름에 연결됐다. 그는 수명이 몇 해밖에 남지 않은 중환자인 것처럼 자주 보도됐다.

전반적으로 보아, 김정일의 건강이 싹 좋은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고 해서 최고 권력자로 집무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에 심각한 이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그러한 전제 아래, 따라서 김정일이 앞으로 예견할 수 있는 시간대에 건강이 나빠져서 정권을 내놓는다든가 정권에서 축출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제 아래 그의 권력 상황을 살피기로 한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 김일성이 죽은 때로부터 3년이 넘도록 김일성이 남긴 2개의 중요한 자리들은 비어 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자리와 이른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자리가 그것이다. 그러다가 김일성이 사망한 지 3년 3개월이 지난 1997년 10월에 와서야 김정일은 당 총비서 자리 하나만을 공식적으로 승계했는데, 그것도 변칙적인 방법을 통해서였다. 이러한 상황은 김정일 정권이 불안정하다는 서방 세계 추측의 원천이 되어 왔다.

그러한 상황은 확실히 정상적이지는 않다. 그렇다고 해서 김정일의 최고 권력자로서의 지위에 이상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김정일의 정치적 안정성 여부를 논할 때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김정일은 아무리 늦게 잡는다고 해도 1973년 또는 1974년 이후 20년 넘게 김일성의 후계자로 체계적으로 키워져 왔다는 사실이다. 특히 1980년대 초 이후 김일성과 더불어 공동 통치자로, 때때로 실질적 통치자로 북한 권력구조의 수뇌부에 속해 왔다. 그동안 김정일의 권력 승계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예외없이 거세됐거나 순화됐다. 북한의 3대 권력 소재

지인 당·정·군의 중요한 자리들에는 김정일에게 충성을 다하는 열성분자들이 포진되어 있다.

둘째, 그렇게 오랜 기간 김정일 후계체제가 준비되어 왔기에 북한 주민들의 대다수는 김정일이 김일성의 후계자임을 믿어 의심하고 있지 않다. 북한 주민들은 김정일이 후계자라는 교육을 지난 20년 이상 너무나 철저히 받았기에 김일성이 죽은 뒤의 북한은 김정일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는 믿음을 대체로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셋째, 그러했기 때문에 김일성이 죽은 뒤 김정일은 곧바로 수령으로 등극할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김정일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 등장한 이후 오늘날까지 어떠한 내부적 도전도 경험한 일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현실은 그의 지도체제가 비교적 안정되어 있거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심각한 동요를 겪고 있지는 않은 것임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김정일의 능력에 관해 검토하기로 한다. 최고 권력자로서의 통치 능력을 김정일은 갖고 있는가? 아니면 서방의 몇몇 매체들이 때때로 보도했듯 술꾼이거나 난봉꾼이거나 자동차광이거나 영화광 또는 변덕장이에 지나지 않는가? 김일성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는 독자적으로 북한을 통치할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북한의 내부 상황에 비교적 밝은 중국의 전문가들은 김정일의 통치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김정일의 어떤 성격적 특성, 심지어 성격적 결함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 역시 김정일이 예측하기 어렵고 무책임하다는 서방 언론의 지배적 인상을 전적으로 배척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김정일이 김일성이 죽기에 앞서 이미 10년 가까운 세월 실제로 북한을 통치했음을 상기시킨다. 특히 경제와 대미 외교 분야에서는 최종적인 결정권을 갖고 많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한다.

이상에서 살핀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결론이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권력 상황만 놓고 본다면 김정일 지도체제가 비교적 안정되어 있거나 최소한 불안정 속의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결론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앞으로 어떤 일정 기간 통치 엘리트 내부에서는 김정일 지도체제에 대한 반대세력이 조직화되지 않을 것 같다.

○ 경제적 위기와 사회통제의 이완 조짐

이상에서 살폈듯이, 김정일의 권력 상황은 비교적 안정되어 있다. 그런데 어째서 김정일 정권의 위기 심지어 북한의 붕괴가 서방세계에서 심각하게 거론되는가?

이 물음에 대한 핵심적인 대답은 북한의 경제 위기 또는 경제 파탄으로 압축된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의 위기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북한의 경제가 얼마나 심각한 위기 수준에 와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석들이 제시되어 왔다.

최근의 국제적 평가로 미국의 록펠러 재단의 재정 지원을 받아 미국의 3개 연구기관들과 러시아의 1개 연구기관이 합동으로 작성한 「북한 상황 보고서」를 지적할 수 있다. 96년 9월 7일에 공개된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경제는 90년 이래 계속해서 1년의 예외도 없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북한 경제는 97년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특히 농업과 임업 및 수산업 등의 1차 산업에서는 물론 공업과 같은 2차 산업에서도 생산량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 수출은 1년에 약8억5천만 달러 규모인데, 외채는 약1백억 달러규모이다. 북한의 국제 지불 능력은 전혀 없다.

북한은 1993년 12월에 제3차 7개년계획(1987~1993)을 마무리 지으면서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고 94년부터 96년까지의 3년을 완충기로 설정했다. 1996년 12월 말에 북한은 완충의 노력이 성공했다고 발표할 수 없었다.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침묵한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완충기의 주요 과제였던 농업과 경공업 및 무역제일주의가 실패했음을 암시한다. 그만큼 북한 경제는 실패와 좌절의 연속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북한에서 경제 성장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게 된 요인들 가운데 첫째는 정치적 요인이다. 경제 논리에 따라 운영해야 할 경제를 주체라는 비과학적 정치논리로써 운영하려는 데서 많은 문제들이 생긴 것이다. 달리 표현해 흔히 '소비에트형 명령 경제의 왜곡된 경제체제'라고 불리는 북한 경제체제의 구조적 잘못이 북한 경제를 파탄에 빠지게 한 것이다.

북한에서 경제 성장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게 된 두 번째 요인은 연료와 전력의 부족이다. 1994년 현재, 북한의 징유 능력은 1년에 약 3백 50만

규모인데, 수입 원유량은 약 1백 36만에 지나지 않는다. 석탄은 1년에 약 5천 2백만이 필요한데 생산량은 약 2천 7백만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1년에 약 7백 10만kw의 전기를 발전시킬 수 있는 북한이 발전 능력의 약 35%인 2백 50만kw 정도밖에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에너지 부족 때문에 북한에서의 공업 조업율은 점점 내리가 93년의 경우 약 30%인 것으로 보고됐다. 이 상황은 97년 현재 개선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1980년대 말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난 식량 부족 역시 이제 하나의 만성적 질환이 됐을 뿐만 아니라 더욱 악화되어 왔다. 그래서 자립과 주체를 자랑하던 북한이 95년 이후 공개적으로 국제사회를 상대로 식량원조를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북한이 '미 제국주의 식민지로 가난과 질병이 가득찬 땅'이라고 묘사했던 남한에 대해서조차 식량원조를 몇 차례 요청했고 또 몇 차례 받아갔다.

식량 부족도 구조적인 문제이다. 집단농장제도가 벗어낸 농민들의 작업의욕 하락, 농업 관련 산업의 구조적인 낙후, 즉 비료, 농약, 농기계, 연료, 농자재, 종자개발 능력 등의 후진성 등이 겹쳐 있는 것이다. 부족한 식량을 사들일 외화는 없다. 이러한 구조적인 것들에 90년 이후 계속되는 병충해나 일기불순과 같은 자연적인 재해가 겹쳤다.

95년과 96년에 각각 발생한 엄청난 큰 물난리와 97년에 발생한 전국적인 가뭄은 농업을 길정적으로 파탄시켰다. 북한의 식량 위기는 여진히 심각하다.

「뉴욕타임즈」의 월터 러셀 미드 기자의 북한 방문 기사는 “시골 지역에서 가축의 씨가 말라 버렸다”고 알리고 있다. 96년 8월에 북한의 수해 상황을 이틀 동안 취재한 그는 “북한 어디에서도 고양이 한 마리 닭 한 마리 구경할 수 없었다. 평양에서는 비둘기 한 마리도 보지 못했다”고 썼다. 96년 수해에 가축 약 48만 마리가 물에 휩쓸려 사라졌으며, 배고픈 북한 사람들이 잡아 먹어 버렸기 때문이다.

이러한 취지의 증인들, 특히 남한으로 탈출해 온 북한 사람들의 증인들은 예외없이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생활상을 전하고 있다. 그들은 북한 주민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풀을 뜯어 먹고 있으며, 심지어 허

기를 못이겨 기절하거나 굶어 죽는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배가 고파 노동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생산이 더욱 부진해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야말로 빈곤의 악순환이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다.

북한의 이러한 경제 파탄, 특히 식량 위기는 사회적 기강을 이완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탈북자들의 증언들은 예외없이 정부와 당 관리들의 부패, 뇌물의 주고 받음, 일반 주민들의 생산 의욕 저하, 통행증 제도의 사실상 무효화, 범죄의 증가, 심지어는 매춘 등을 전하고 있다. 암시장의 확대 같은 자본주의적 초기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념적 교육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 2~3년 사이 탈북자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사실이 그것을 증거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김정일 정권은 새로운 방식들을 통해 사회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암거래와 범죄 및 매춘 등 갖가지 사회비리를 대대적으로 단속함과 아울러 국경지역 및 경제특구지역에 대한 출입 및 외국인과의 접촉을 제한함으로써 외래사조와 외부정보의 유입을 차단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또 내부 결속의 강화를 위해 민족주의 의식을 북돋고 남한 정권에 대한 적개심을 높임과 아울러 학습과 조직활동의 체계적 실시 및 사상 교양 등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김일성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정체성의 상실, 혁명열기의 소진, 경제난 및 관료부패에 대한 주민 불만의 증대 등으로 사회적 응집력이 약화되고 있다. 또 경제난 지속과 외부정보 유입의 증대 등에 따라 개인적이거나 집단적인 불만이 조직적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차차 엿보이기 시작한다. 특히 자원 및 식량 배분과 관련해 변방지역에서 불만이 높아질 수 있고, 해외생활경험자와 젊은 세대 및 소외계층 가운데 체제비판 세력이 형성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

○ 북한은 붕괴로 가고 있는가?

북한의 경제적 위기 상황과 그것에 따른 사회통제의 이완은 북한이 붕괴로 가고 있느냐는 물음을 제기시켜 왔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북한 붕괴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 흔히 북한 붕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김정일

정권의 붕괴,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 이른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붕괴라는 세 수준에서 나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일원적인 사회인 북한에서는 그 붕괴가 세 수준에서 동시에, 또는 약간의 시차만 둔 채 사실상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권만 교체된 채 체제와 국가는 존속될 수도 있다.

가장 초보적인 수준에서 우선 정권의 붕괴 문제를 생각해 본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반되는 분석들이 제기되어 왔다.

첫째는 국가의 소멸은 커녕 정권의 붕괴조차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이다. 중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대체로 그러한 입장을 보인다. 그들은 오늘날의 북한 경제 상황과 식량 상황이 1950년대 말과 1960년대 초 사이에 발생한 중국의 그 상황들에 비슷하다고 주장하면서 그때 중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으나 대중반란 같은 일이 없었음을 상기시켰다.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 가운데서도 같은 견해를 제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북한의 급격한 붕괴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연착륙을 유도하려는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 개선도 가까운 장래에 실현되어 두 나라로부터 비록 제한된 범위 안에서나마 경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며 그것은 북한 경제의 소생을 돕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또 러시아와 중국도 북한에서의 격변이 일어나 마침내 북한이 국가적 수준에서 소멸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김정일 정권이 유지되도록 경제적 지원을 베풀 것으로 내다본다.

둘째는 사회적 불안정이 이미 시작된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며, 식량 위기가 극복되지 않으면 결국 군부 쿠데타나 대중 반란이 일어나 앞으로 5년 안에 최소한 정권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견해이다. 김정일의 공식적 권력 승계가 실현됐다고 해도 그것이 김정일 정권의 영속화를 결코 뜻하지 않는다고 그들은 강조한다.

앞에서 인용한 「북한 상황 보고서」는 “악화된 경제 사정으로 내부의 변화 압력이 이미 상당한 기간 확산되고 있다. 중대한 국면에 처해 있는 현 시점에서 그 압력은 임계질량(critical mass)에 접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이어 “누진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식량난은 결국 배고픈 시민들의 봉기와 대규모 시위 사태를 유발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

황이다”라고 평가했다. 이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북한의 국가 경제는 김정일 정권 유지에만 제한적인 기능을 발휘할 정도로 이미 작동이 중단된 상태여서 자체적인 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김일성이 죽은 뒤의 북한은 확실히 체제 병리의 징후들을 점점 더 많이 보여 주어 왔다. 북한이 내세우는 ‘우리식 사회주의’는 혹독한 시련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김정일 정권은 이것을 극복해낸 것인가? 앞에서 소개했듯, 꽤 많은 북한 전문가들은 그리지러 극복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김정일 정권이 제한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개방과 개혁 조치를 취해 나가고, 또 중국으로부터 석유와 석탄 및 식량을 포함한 경제 원조를 이끌어 내고, 미국으로부터 적게나마 경제적 지원을 얻어 내는 경우, 가난과 식량위기에 익숙해 있으며 통제에 쉽게 복종하는 북한 인민들은 결코 집단적 반란을 일으키지 않으리라고 본다. 그들은 북한 인민들이 오늘날에도 질서있게 행동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군부 쿠데타도 결코 쉽지 않으리라고 그들은 전망한다.

종합적으로 그들은 다음과 같이 결론내린다. 정치적·사회적 통제장치의 가동에 의해 김정일에 반대하는 세력이 조직화되기가 어려우며, 작은 규모의 소요 사태는 김정일에 충성하는 군부에 의해 빠르게 진압된 것이고, 김정일이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 대립이 발생하더라도 권력투쟁으로 확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전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김정일 정권은 마침내 ‘내부폭발’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견해도 유력하다. 식량위기가 점점 더 심각해지면 김정일과 체제의 정통성에 대한 인민들의 의문이 제기될 것이며 김정일 정권 유지에 최후의 보루인 군인들 가운데서 기율을 잃게 될 군인들이 적지 않게 나타날 것이라는 미국의 국방부 소속 한 북한 전문가의 최근 증언은 이러한 맥락에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김정일 정권 붕괴론에 대해 비판적인 남한의 몇몇 북한 전문가들조차 북한의 식량 위기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체제 위기와 체제 변동의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국가의 배급 및 생필품 공급체계의 동요 내지 붕괴는 동원화에 기초한 병영(兵營)사회주의의 기초를 흔들 것이라고 그들은 전망한다.

미국의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의 몇몇 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일 정권의 붕괴는 이미 시작됐으며 그것은 어느 세력도 어느 나라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김정일이 경제를 회생시키겠다고 개혁과 개방 정책들을 취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그들은 예측했다. 그리고 김정일 정권의 붕괴는 중국적으로 북한이라는 국가의 소멸로 이어질 것이라고까지 전망했다.

만일 북한의 상황이 이 시나리오대로 전개된다면 한반도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김정일과 그의 교조주의적 추종자들이 그 개연성이 높지는 않지만 삼손 방식의 선택, 곧 남한과의 동반자살의 길을 걷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 북한의 존속 시나리오와 남북관계 전망

북한의 현황과 미래를 앞서서처럼 살필 때 남북한 관계에 대한 전망은 크게 보아 두 가지로 나뉘게 된다. 하나는 북한이 앞으로 일정한 기간 존속되는 상황에서의 남북한 관계의 예상되는 모습이 될 것이며 다른 하나는 북한이 궁극적으로 붕괴되는 상황에서의 남북한 관계의 예상되는 모습이 될 것이다. 존속 시나리오 아래서, 우선 고려되어야 할 요인들은 남한 내부의 정치 일정과 북한 내부의 정치 일정이다.

북한에서 97년 10월에 김정일의 공식 승계가 이뤄졌고, 이어 98년 2월에 남한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함으로써 남북은 정상회담을 포함한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향을 폭넓게 검토할 수 있게 됐다.

여기서 우리가 남북관계를 장기적 안목에서 내다볼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적 사안은 제네바 합의에서 규정된 '북한에 경수로를 세워주는 사업'의 추진 문제이다. 앞으로 10여년에 걸쳐 이 사업을 중심삼아 남과 북 사이에 사람과 물자의 교류가 큰 규모로 이뤄지고, 또 이것들과 관련해 협정들이 맺어지고 협력의 경험이 쌓이게 되면 남북관계는 사실상 협력과 공존의 단계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앞으로 경수로 사업이 추진되면 추진될수록 그것에 관련된 이해당사국들의 이해관계가 크기 때문에 남과 북과 미국 모두가 타협과 절충의 입장을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되며, 이 점

은 존속 시나리오가 맞는 경우 남북관계의 장래를 비교적 낙관적으로, 또는 덜 비관적으로 보게 만든다.

특히 경수로 건설에 관련된 현안들, 예컨대 북한의 과거 핵 활동 문제에 대해 매듭이 지어진다고 하자. 그렇게 되면 경수로 건설이 완공되는 시기를 앞뒤해서 군사적 신뢰구축조치, 군비통제,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문제 등의 매우 민감한 군사 문제들에서도 해결 방안이 찾아질 수 있게 된다. 그 사이에 4자 회담이 진전되면서 그러한 방향으로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이제 결론을 내려 본다. 존속 시나리오 아래서,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의 기본 방향은 북한체제의 급격한 붕괴 및 대남 무력도발을 방지하기 위한 북한 체제의 안정화에 두게 된다. 여기서 강조돼야 할 점은 북한 체제의 안정화란 북한 체제의 현상 유지가 아니라 북한 체제의 개혁 및 개방과 대남 적화정책의 본질적 변화를 뜻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기본 방향 아래, 우리 정부는 대북정책의 기본구도로 「남북화해·협력체제의 구축 → 남북평화공존체제의 구축 → 평화통일」로 설정한다. 그리고 그 구도를 실현시키기 위해 지난 92년에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이 실현되도록 노력함으로써 분단체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데 힘쓰게 된다.

● 북한의 붕괴 시나리오와 남북관계 전망

그리만 급변 시나리오 또는 붕괴 시나리오 아래서 남북한관계의 장래를 어떻게 내다 볼 수 있을 것인가? 김정일 정권의 정치사회적 통제력과 응집력을 감안할 때 북한에서 단기적으로 김정일 정권의 교체 및 체제 붕괴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가 계속 회복되지 않고 대외적축 및 투자유치에 따른 외부 정보의 유입 증가, 사회적 이탈행동 및 유동성의 증가 등으로 주민 불만이 조직화되고 여기에 지도층 사이의 노선 대립이 중첩될 경우, 인민 봉기나 쿠데타로 만미암아 급격한 정치적 변화가 초래되거나 그 과정에서 우발적 무력도발이 발생할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

그러면 붕괴 시나리오 아래서 남북한 관계는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우선 붕괴 시나리오가 전개될 때까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여러 가지 징후들을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해, (1) 군부의 위상 및 역할의 현격한 강화, (2) 지도층의 잦은 인사교체와 지도층 사이에서의 노선 대립, (3) 암시장과 밀수 등 지하경제와 불법행위의 확산, (4) 탈북자의 늘어남, (5) 산발적인 주민 소요의 일어남, (6) 해상 및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적 시위 등을 주시하면서 북한에서의 급변 사태의 발생에 대한 조기경보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붕괴 시나리오와 관련해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것은 북한 내부에서의 민중 붕괴와 그것의 탄압을 둘러싼 유혈사태의 발생, 큰 규모의 난민 발생, 그리고 국지적 또는 비정규적 무력도발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다. 이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 국가들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려고 할 것이며, 이렇게 되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한국 정부로서 취해야 할 가장 1차적인 조치는 남북한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는 일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안보태세를 굳건히 하고 외교능력을 강화하는 조치들을 주도면밀하게 취함과 아울러 북한 상황이 비폭력적이면서 점진적으로 개선되도록 돕는 정책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을 위해서는 북한 내부에서 개혁 개방 세력이 성장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국제적 해결방식의 측면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 강대국들의 기본자세와 우리의 대외정책 방향

한반도의 통일이 성취되지 못한 1차적 책임은 남과 북의 한민족 스스로에 있다. 남과 북은 자신들 사이에서 작동이 가능한 합의를 만들어 내는 데 대체로 실패했으며, 매우 어렵게 만들었던 경우에도 실행에 옮기는 데 실패했다.

○ 주변 열강은 대체로 현상 유지를 선호한다

민족 분단의 모든 책임을 한민족에게만 돌리는 것은 부적절하다. 1945년 여름에 한반도를 분단시켰던 장본인인 냉전체제, 그리고 그 냉전 체제에 편승해 남북통일을 방해하거나 또는 남북통일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한반도 주변 열강, 특히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에도 상당히 많은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해 주변 열강은 한반도의 통일보다는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1차적으로 한반도의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예상하기 어려운 어떤 돌발적이며 파괴적인 행위들이 그들의 개입과, 심지어는 그들 사이에서의 충돌을 가져오는 것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에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점에 있다. 그들에게는 남북한 사이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한반도의 현상유지는 건널 만한 일로 여겨지는 것이다.

2차적으로 통일한국에 대한 경계심에 연관된다. 예컨대 중국이나 러시아는 남한이 북한을 흡수하는 형태로 통일이 실현됐을 때, 북한이라는 완충지대가 사라지고 강력한 군사력과 공업력을 지닌 하나의 자본주의적 중급국가가 자신과 국경을 직접 접하게 된다는 점을 경계하게 될 것이다.

일본 역시 8천만에 가까운 인구를 지닌 강력한 군사·공업국가의 등장에 심리적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다. 특히, 물론 그 개연성은 거의 없지만 북한이 남한을 흡수통일하게 된다면 공산화 통일된 코리아는 일본의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체제의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일본의 대다수 국민들은 판단할 것이다.

이러한 경계심에서 상대적으로 자유스런 강대국은 미국일 것이다. 이 점은 물론 남한에 의한 북한흡수통일의 경우에만 유효하다. 만일 그 반대의 경우라면, 미국은 일본과 똑같이 불안감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반드시 강조돼야 할 점들이 있다. 첫째, 주변 4강 가운데 한반도의 통일문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나라는 1차적으로 미국이고 2차적으로 중국이며, 러시아와 일본은 그 두 나라보다 영향을 덜 미치게 되리라는 점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북한에

대해 어떤 정책을 쓰느냐에 따라 북한의 행로에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며 그 변화는 물론 남북관계에 영향을 줄 것이다.

둘째, 주변 열강의 한반도정책이 미치는 영향은 남과 북의 한민족 스스로가 취하는 행동들이 미치는 영향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는 점이다. 지난날 동서냉전 시대에는 국제정치의 흐름이 한반도의 운명에 압도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동서냉전이 끝난 오늘날에는 한민족의 장래에 대한 한민족 스스로의 영향력이 크게 늘어났다.

간단히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만일 남과 북이 통일을 향해 합의한다고 할 때, 비록 그것이 불만스럽다고 해도 주변 열강이 그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는가? 필자의 견해로 그 대답은 부정적이다. 주변 강대국들이 언제나 반대하고 심지어 방해했던 독일의 통일도 동독이 내부적으로 붕괴하는 현실을 적절히 활용한 서독의 외교적 노력의 결과로 성취됐다. 하물며 독일의 통일에 비해 주변 열강의 반대가 훨씬 약한 한반도 통일의 경우에는 더 말할 것도 없다.

바야흐로 국제정세는 냉전의 잔재가 남아 있는 유일한 지역인 이 동아시아에서도 국가들 사이의 화해와 협력을 향해 치달리고 있다. 물론 경제전쟁과 무역전쟁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각국의 군비증강의 추세 그리고 그것에 따른 국가들 사이의 군비경쟁의 추세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의 등장과 성장에서 보듯이 이 지역 국가들도 상호존중과 공동번영을 향해 협력을 강화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흔히 경계의 대상으로 논의되는 중국의 '군사대국화' 추세, 그리고 일본의 '대외 군사팽창주의' 경향은 경계는 하되 과민한 반응을 보이지 않아도 괜찮을 것이다. 군사력으로 국제분쟁의 해결을 시도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음을 그들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한반도 통일문제의 국제적 여건을 낙관적으로만 파악하는 것은 아니다. 국제정치에는 하나의 주기가 있다. 긴장과 대결의 시대가 있는가 하면 화해와 협력의 시대가 있다는 뜻이다. 1980년대 말부터 긴장과 대결의 시대가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대체되어 왔으나, 한 주기를 15년 정도로 볼 때, 2005년을 전후로 해서 다시 긴장과 대결의 시대로 접어들지 모른다.

○ 한반도 통일을 위해 국제사회에 보여야 할 원칙적 행동 지침

바로 그러한 예견에서 필자는 화해와 협력이 지배적인 이 시기에 남북 관계를 결정적으로 개선시켜 평화통일의 토대를 쌓아올리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만일 이 시기를 놓친 채 긴장과 대결의 주기에 집어들게 된다면 남북통일의 실현 개연성은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국제정세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가? 우선 원칙론의 입장에서 말하기로 한다.

첫째, 우리는 한국이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라는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깊이 심어주어야 한다. 한국은 지난날 호진직 국가라는 이미지를 남긴 때가 있었다. 남북한 대결상황 아래서 또는 동서 양대진영의 대결 아래서 자신의 생존을 1차적으로 군사력 증강에 의존하게 되다 보니, 그러한 이미지가 형성됐음이 사실이다. 물론 최근에 와서는 다행스럽게도 그러한 부정적 이미지는 많이 개선됐다. 그러나 화해와 협력의 시대에 평화에 호국으로서의 이미지를 더욱 확립하지 않고서는 통일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

둘째, 이 점과 관련해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통일이 한민족의 평화와 복지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전 그리고 세계의 평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설득시키는 일이다. 이것은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주변 열강의 경계심을 완화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분단 시대에 서독이 통일과 관련해 취했던 대외정책의 기본방향을 잠시 생각하게 된다. 서독은 독일의 통일이 독일민족의 평화와 복지에 이바지할 것임은 물론이지만 유럽의 평화와 번영에 대해서도 이바지할 것임을 이웃 나라들에게 늘 강조했다.

셋째, 이상의 두 가지에 연결되는 것으로, 한반도의 통일이 반드시 민주적이며 평화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그 과정에서 폭력이나 무력은 철저히 배제된 것이라는 점이 강조돼야 한다. 이것은 한반도의 통일이 남북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점진적이며 단계적으로 성취되어야 한다는 뜻을

내포한다. 이것은 또 남한이 북한의 붕괴를 의도적으로 촉진시켜 북한을 흡수통합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는 뜻을 내포하는 것이다.

만일 한반도의 통일이 무력 또는 폭력을 수반하는 형태로 추진될 것이라는 판단을 이웃 나라들이 갖게 된다고 하자. 그러면 그들은 한반도에 큰 규모의 유혈사태가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끌려들어 가게 될 것을 우려해서 경계심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한 우리와 경계는 결국 한반도의 현상 유지를 적극 지지하는 정책을 지속시키게 될 것이다.

넷째, 우리는 한국이 대외적으로 자주국가라는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깊이 심어주어야 한다. 한국이 어느 한 특정 국가에 의존해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대외적으로 주게 되면 그것은 한국의 통일노력에 대해 다른 주변 열강의 의구심과 경계심을 유발시킬 수 있다.

그러한 시각에서, 우리는 이웃 나라들에 대해 균형 있는 외교를 취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매우 잘 훈련된 외교 기술을 요구하게 될 것임은 물론이다.

다섯째, 한국이 '신용있는 나라'라는 믿음을 국제사회에 심어주어야 한다. 한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 안에서 신용과 평판을 얻어야 성공할 수 있듯, 한 국가도 국제사회에서 신용과 평판을 얻어야 성공하는 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은 자신이 국제사회에서 한 말과 약속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국제적 공약을 반드시 성실성의껏 지켜야 한다.

여섯째,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의 원리원칙을 충실히 지켜 한국을 선진적인 민주복지국가로 계속해서 발전시켜야 한다. 한국이 이 궤도에서 이탈하게 될때, 한국의 국제적 신뢰도는 크게 떨어지게 되며 그렇게 되면 한국의 통일노력의 성실성이 의심받게 되어 국제적 지지기반이 약화된다.

○ 한반도 통일을 위해 취해야 할 구체적 외교전략

그러면 이러한 원칙적 행동지침 아래 한국이 구체적으로 취해야 할 외교전략은 어떤 것들일까?

첫째, 미국의 '확대전략' (the strategy of enlargement)에 발맞추는 것이 현명하다. 여기서 잠시 클린턴(Bill Clinton) 행정부의 '확대전략'의

논리를 살피기로 한다. 클린턴 행정부에 따르면, 이 전략은 공산권이 붕괴한 뒤의, 곧 냉전 이후 시대의 국제상황에 맞춰 구상된 것이다. 그것은 한마디로 미국적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전세계로 확대시킨다는 전략이다. 마치 소련이 지난날 전세계의 공산화를 추구했듯이 미국은 이제 전세계의 자유민주주의화를 추구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면 그 기본발상은 무엇인가?

이 전략을 세운 이론가들에 따르면, 지난 1백 년의 세계 역사를 살필 때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운영하는 나라들끼리 전쟁을 한 일이 없다. 전쟁은 자유민주주의와 독재주의 사이에서, 또는 독재주의와 독재주의 사이에서 일어났을 뿐이다. 그러므로 전세계를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로 바꾼다면 전쟁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영원한 평화'가 자리잡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발상이 반드시 독창적인 참신한 발상은 아니다. '영구평화론'을 일찍부터 제창했던 사상가들은 경제협력력을 많이 하고 무역을 많이 하는 나라들 사이에서는 전쟁이 일어날 위험성이 사실상 사라진다고 주장했던 것인데, 이러한 주장의 바탕에는 상업주의적 국가들 사이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기 어렵고 평화공존관계가 지속된다는 믿음이 깔려 있었던 것이다. '영구평화론'의 대표적 철학자였던 칸트(Immanuel Kant)도 그것과 비슷한 생각을 가졌었다.

미국적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전세계에 확대시킬 때 '영구평화'가 가능하리라는 전제에서 출발한 '확대전략' 아래서 미국은 오늘날 중국의 인권상황을 비판한다. 중국의 비민주적 요소들을 제거시켜 중국을 자유민주주의국가로 만들겠다는 구상의 첫걸음인 것이다. 중국에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뿌리내리면 그 중국은 결코 전쟁을 일으켜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나라가 되지 않으리라고 '확대전략'의 이론가들은 확신한다.

이 이론가들은 자신들의 확신의 근거를 아시아에서는 일본에서 찾는다. 미국이 패전국 일본을 점령한 뒤 미국적 가치관과 제도를 이식시켜 일본을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우등생으로 바꿔 놓았기 때문에 일본은 평화국가로 남아 있고, 앞으로도 평화국가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미국의 '확대전략'은 물론 한반도에도 적용되고 있다. 한반도에서 전

쟁의 위험을 없애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우선 북한을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국가로 바꾸는 것이라는 논리 아래 북한의 체제적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이미 1993년 2월에 문민정부가 출범한 뒤 자유민주주의의 길에 확실히 들어서선 만큼 북한이 자유민주주의의 길로 들어서기만 한다면 남북한 사이의 무력충돌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평화통일의 길이 반드시 열릴 것이라고 '확대전략' 이론가들은 믿고 있다.

그러면 북한에게도 미국적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확대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확대전략' 이론가들에 따르면, 그것은 북한을 서방세계로 끌어내는 것이다. 쉽게 말해, 북한과 서방세계와의 접촉과 교류 및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서방세계의 사람과 물자 및 문화가 북한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북한은 별 수 없이 체제적·구조적 변화의 길을 밟기 시작한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북한의 통치엘리트들은 물론 미국의 확대전략이 궁극적으로 북한의 체제적·구조적 변화를 겨냥하고 있음을 깨닫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개방정책에 대해 부정적이다. 개방을 했다가 미국의 '확대전략'에 말려들어 결국 북한체제의 침식과 궁극적인 붕괴를 보게 되지 않을까 해서 개방을 주저하는 것이다.

여기에 북한의 고민이 있다. 개방을 하지 않으면 이미 깊이 침몰하고 있는 북한의 경제는 그나마 회생의 기대조차 갖기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개방을 하자니 체제붕괴의 위험성이 따라온다. 이럴 수도 없고 지릴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형국이다.

'확대전략'에 입각한 미국의 북한정책의 이념적 기초는 한국의 그것과 일치한다. 한국의 북한정책의 이념적 기초는 역시 북한의 자유화요, 민주화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우리로서는 미국의 '확대전략'과 보조를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거듭 말하지만, 북한의 자유화와 민주화가 성사되어야 한반도에도 항구적인 평화가 뿌리내리게 되고 평화통일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매개로 중국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북한이 개방정책을 통해 서서히 자신을 변화시키도록 강력히 권고할 수 있는 또하나의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은 시장경제 원리를 받아들이고 자

본주의 경제운영을 함으로써 국부(國富)를 증대시키고 경제대국으로 받돋움했으면서도 중국공산당 1당 독재체제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의 통치엘리트들은 북한의 통치엘리트들에게 '중국모델'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중국은 북한의 경제에 대해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갖고 있다. 물론 북한은 자국에 대한 외국의 영향력 행사에 대해 대단히 저항적이다. 그러나 북한의 대내외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만큼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다.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매개로 중국을 활용하기 위해서 한국은 중국과의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경제협력과 통상의 방면에서 두 나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중국은 북한의 변화를 한반도 통일의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는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셋째, 러시아와의 신뢰유지를 위해 많은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 것이다. 1991년에 소련이 해체된 뒤 옛 소련의 직립한 후계국가로 공인된 러시아는 강한 강대국 향수를 갖고 있다. 바꿔 말해 소련의 해체에 따라 초강대국의 지위에서 밀러나게 되자 자존심에 상처를 입게 됐고, 따라서 다시 초강대국의 지위에 복귀하려는 열망을 갖고 있다.

그러나 국내적 혼란 때문에 대외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이 점은 앞으로 몇 해 동안 똑같은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에 대한, 그리고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관심과 영향은 현실에 있어서는 제한적일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는 북한 핵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1994년 봄에 러시아를 포함한 8자회담의 개최를 제의했던 데에서 나타났듯,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 이 점을 고려해 한국은 러시아의 상처난 '강대국 자존심'을 살려주면서 한국의 입장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 그리고 러시아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북한이 개방의 길을 걸도록 설득하게끔 유도해야 할 것이다.

넷째, 일본이 북한과 수교하는 것을 측면지원하는 것이 현명하다. 1998년에 미국과 북한은 상대방 수도에 각자의 연락사무소 또는 임시사

무소를 개설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은 일본과 북한 사이의 수교 교섭을 촉진시키는 주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일본과 북한 사이의 국교수립은 북한이 개방의 길을 가도록 도울 것이다. 결국 앞으로 2~3년 안에 만일 북한에서 격변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미국과 일본의 북한수교가 실현되고 따라서 미·러·중·일 등 주변 4강의 남북한 동시수교가 실현될 것이다.

이것은 우선 북한의 통치엘리트들에게 북한의 체제유지에 대한 자신감을 높일 것이다. 이것은 또 남북대화가 재개되고 진전되도록 유도하는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 유엔에서의 외교활동을 더욱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991년 가을 이후 남과 북은 유엔의 회원국으로 가입해 있다. 남과 북이 유엔을 통해 남북대화를 진전시킬 수 있는 것이다.

민족대단결을 위한 남북간의 협력

남북간 교류협력 및 정치적 협의의 기본원칙과 전략

북한의 변화유도가 한반도 통일실현의 첫 번째 고비를 넘어서는 열쇠라고 볼 수 있다. 물론 한국도 변화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키고 자본주의를 건강하게 발전시킴으로써 선진된 민주복지국가의 반열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변화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더욱 많이 강조돼야 할 곳은 남과 북 가운데 북이라는 데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이다. 북한이 현재의 전체주의적 독재체제와 스탈린주의적 중앙명령경제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외적 폐쇄와 국제적 고립에 머물러 있는 한 남북의 평화통일은 커녕 남북의 의미있는 관계개선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필자는 북한이 1단계로는 최소한 개발독재체제의 수준으로 변화하고 2단계로는 사회민주주의의 수준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 북한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길은 남북한 사이의 교류와 협력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필자는 이 대목에서 지난날 서독의 브란트(Willy Brandt) 정부가 통독정책의 상징적 구호로 제시했던 ‘집착을 통한 변화’의 뜻을 되새겨 보고자 한다. 동방정책의 기수였던 브란트 총리는 동서독 사이의 교류와 협력을 증대시킴으로써,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 서독의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적 번영의 실상을 동독 사람들이 느끼고 부러워하게끔 유도함으로써 동독의 변화를 유도하고자 했던 것이다.

브란트의 이 정책은 1972년에 동서독 기본관계협정이 맺어진 뒤 보다 더 활발히 추진됐다. 이 협정에 의해 동서독 사이에는 이른바 3통, 곧 통신과 통행 및 통상이 제도적으로 실시되게 됐다. 특히 동독 사람들은 서독의 신문과 잡지, 라디오 및 텔레비전을 접할 수 있게 됐다. 이것은 동독 사람들의 의식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으며, 그 변화의 축적 위에서 동독 사람들은 1989년 가을에 마침내 냉전과 질곡의 상징이던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림으로써 동독 붕괴의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던 것이다.

이 대목에서 또 하나 생각하게 되는 것은 1975년 7월에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에서 채택된 ‘헬싱키 선언’이다. 미국, 캐나다, 소련을 비롯해 동서유럽의 35개국 이 참석한 유럽안진보장협력회의(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는 10개 원칙이 천명된 ‘헬싱키 선언’을 채택했던 것인데, 이 선언은 동서유럽 사이의 정보교환을 제도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이에 따라 서방세계의 자유롭고 번영된 삶의 모습이 공산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됐고, 그 결과 공산 국가의 인민들이 의식변화를 일으켜 1989~1991년 사이에 시민민주혁명을 일으키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상에서 살핀 서독의 동방정책, 그리고 헬싱키 선언은 “북한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의 물음에 좋은 시사점을 준다. 동서독 사이에, 그리고 동서 양대진영 사이에 진행된 교류와 협력이 종국적으로 동독에, 그리고 동방 진영에 변화를 불러일으켰듯, 남북한 사이에 교류와 협력이 일어나면 반드시 북한에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뜻이다.

○ 공식 대화를 통한 합의의 창출

한국과의 교류와 협력의 증대를 통해 북한이 남한의 영향을 받고, 그 것과 병행해 서방세계와의 교류와 협력의 증대를 통해 북한이 서방세계의 영향을 받아 비록 친친히 단계적으로나마 이념과 체제의 양면에서 한국과 공통점을 형성하게 됐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남북한 사이에서 정부 대 정부의 공식적 협상을 통해 하나의 협력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공동시장' 또는 '남북한 경제협력체'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협력공동체가 통합이론이 말하는 이른바 '과급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 남과 북은 1992년 2월에 발표됐던 '남북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로 되돌아 갈 수 있다. 그래서 이 합의를 실천에 옮기기만 한다면 남과 북은 사실상 준(準)통일의 상황을 한반도에 조성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남과 북은 남북연합을 발족시키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말하자면, 정치적 통합의 첫 단계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남과 북이 이 단계에서 머물고 더이상 진전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은 축하받기에 충분한 성공이다. 그러나 남북연합이 실시되게 되면 거기서 단일 중앙정부 아래서의 통일국가로 가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게 토론돼야 할 주제는 군비통제 또는 군비축소의 문제이다. 오늘날 남과 북은 각각 군비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그것 때문에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투자를 과감히 하지 못하고 있다. 또 지나친 군비경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협력을 가로막는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남과 북 사이에서 기초적인 협력공동체를 발족시키는 시점에서 남과 북은 진지한 협의를 거쳐 군비통제를 실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앞에서 말한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을 통해 군사대결을 제도적으로 완화시켜야 할 것이다.

오늘날 남북은 모두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도 남북은 모두 서로 사이의 경제 교류와 협력의 길을 찾아야 할 것이며 군비부담을 더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한국의 자기 개혁

세계 많은 나라들의 통일의 역사를 살펴 볼 때, 어느 나라에서나 통일을 주도해 나간 지역이 따로 있었다. 예컨대, 미국의 13개 주(州)들이 1차적으로 하나의 연합 국가로 통일을 지향하던 때 펜실베이니아 주와 매사추세츠 주 및 버지니아 주 등이 그 일에 앞장섰다. 또 1950년대 후반에 통일아랍공화국(UAR)이 창설될 때는 이집트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우리 역사의 경우, 신라가 3국 통일에 앞장섰다. 에티지오니(Amitai Etzioni)라는 학자는 이러한 국가를 '선도적 국가'라고 불렀다.

21세기 한반도의 통일을 이끌어 갈 쪽은 우리 한국이다. 한국이 통일 한국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한국의 국력이 북한의 국력보다 월등히 앞서 있으며, 한국이 통일한국의 이념이 될 자유민주주의의 평화를 옹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은 최근 IMF(국제통화기금) 관리 상태가 보여주듯 심각한 경제적 고통 속에 빠져 있다. 우리는 국민적 지력을 발휘해 이 고통을 이겨내야 할 것이다.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적절한 계획에 따라 IMF와의 약속을 지키는 가운데 정부와 기업 및 근로자, 그리고 각계각층의 국민 모두가 고통을 공평하게 분담하면서 함께 땀흘려 일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국난을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모든 부문에서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개혁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건강하게 발전시켜 우리 나라를 선진된 민주복지국가로 키워야 하며,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잘 사는 사회로 바뀌어야 한다.

그 때 북한 동포들은 우리를 진정으로 부러워하고 우리에게 진심으로 합류해 들어 올 것이다. 그것이 평화통일의 구체적 표현인 합류통일의 물꼬를 트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만일 북한이 진심으로 우리를 선망하고 우리에게 합류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에게 어쩔 수없이 이른바 '흡수통일'로 가게 될 때, 그들은 통일한국에 대해 비합조적이거나 심지어 저항적이 될 수 있다. 그들이 우리에게 '정복' 당해 통일이 강요됐다고 확신한다면 그들 가운데서 분리주의자들이 출현해 통일한국을 향해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한 불행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한국을 '매력 있는 나라'로 잘 키워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주변의 쇠붙이들이 자식에 달라붙듯, 북한 동포들이 한국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들어올 것이다.



통일한국의 미래상

통일한국의 미래상은 어떻게 설정될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 말해, 통일한국의 미래상은 평화통일을 큰 전제로 하여 우리 민족의 최대 염원이 담겨야 하고 인류사회의 이상으로서 국내외의 공감을 얻는 그러한 방향이 돼야 할 것이다. 이것을 우선 정치·경제·사회 등 분야별로 설명하기로 한다.

○ 통일한국의 정치·경제·사회체제의 모델

우선 정치분야에서 통일한국은 이념과 체제에서 민주주의를 뼈대로 삼아야 한다. 여기서 민주주의라고 할 때, 그것은 첫째로 평등주의이다. 이 원칙에 따라 통일한국에서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각 개인의 기회를 고르게 하고 국민생활의 고른 향상을 기해야 할 것이다. 누구든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될 것이다. 가난한 사람과 넉넉한 사람의 차이는 인정되나 이러한 차이에 바탕을 둔 계급이 인정대서는 안될 것이며, 차별과 계급없는 사회가 돼야만 하겠다

둘째가 자유주의이다. 이 원칙에 따라, 통일한국에서는 정치적 활동이 모든 방면에서 보장돼야 한다. 양심·사상·학문·예술·대학·언론·출판·집회·걸사·거주이전·해외여행·해외이주·통신·주거·사생활·국적이탈·생명·직업선택·학업·기업의 자유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셋째가 복지주의로서 그것은 빈곤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뜻을 지닌다. 이 점과 관련해 김철수(金哲洙) 교수는 “국민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국민의 균등한 생활향상은 통일한국의 지표여야만 하겠다. 이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물질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이 보장돼야 하며, 완전고용에의 권리·휴식권·주택에 관한 권리·적정임금에 관한 권리·노동3권 등이 최대한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한다.

통일한국의 국가형태는 당연히 입헌공화정이다. 구체적으로 말해, 의회민주정치를 실시하며 직업공무원제도를 보장하고 헌법재판소를 개설하며 경제적 민주정치를 실현한다.

다음으로 통일한국의 경제체제에 대해 생각하기로 한다. 통일한국의 경제는 복지국가의 실현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 통일한국의 경제체제는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하되, 복지국가의 이념과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을 동반하는 방향으로 마련돼야 할 것이다. 특히 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해 통일한국의 경제는 국민을 빈곤과 실업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하고 강력하고도 포괄적인 사회보

장제도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에 앞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은 남한에 비해 훨씬 떨어지는 북한의 산업과 경제를 통일 이후 어떻게 남한수준으로 끌어올리느냐의 문제이다. 이 문제는 결국 남한이 부담하게 될 통일비용의 문제로 돌아가며, 남한은 지금부터라도 통일비용을 심각하게 준비해야 한다.

통일비용과 관련해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다. 우리 사회일각에서는 통일비용이 너무 크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통일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통일비용보다 분단비용이 훨씬 더 크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분단의 지속 때문에 남북이 감당해야 하는 국제사회에서의 외교적 경쟁비용, 그리고 무엇보다 군비경쟁비용은 엄청난 부담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일한국의 사회체제에 대해 생각하기로 한다. 그것 역시 통일한국의 경제체제와 성격을 같이한다. 통일한국의 미래상은 체제면에서 볼 때 남한의 자본주의체제가 자신의 장점을 살리고 결함을 시정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보강되어 북한의 공산주의체제를 변환시킬 수 있는 최적(最適)체제로 전환하는 데에서 찾을 수 있는데, 김윤환(金潤煥) 교수에 따르면 그 최적체제가 바로 복지사회체제인 것이다.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이상과 같이 생각하면서도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즉 자유민주주의 복지국가의 모델에는 문제가 없는가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안청시(安淸市) 교수는 “21세기의 세계에서 20세기적 이념체제와 제도관행들이 여전히 유효할 것인가?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복지국가적 처방에는 어떤 한계와 결함이 있는가? 앞의 이념과 처방이 통일된 한국의 장래에도 그대로 적합하며 적용가능한 것들인가?”라고 묻고 있다. 그는 이어 “자유민주주의와 복지국가의 이름 아래 탄생·발전한 선진 민주사회의 신조합주의국가는 오늘날 공공분야의 과도한 팽창을 초래하여 국가자본주의의 폐해가 누적되고 있다. 미래의 민주정치가 이와 같은 팽창적 국가체제를 언제까지 용납할 것인지는 의문이다”라고 부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선진사회의 일각에서는 자유민주주의의 한계와 복지국가의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시민주도형 사회를 모색해 나가고 있다. 시민주도

형 사회는 국가통제형 사회에 대응되는 체제모형이다. 그것은 국가가 시장을 자의적으로 제한하거나 사회를 과잉지배하지 못하도록 중앙정부의 개입을 줄이고 지출을 억제해 나가는 길이다”라고 결론지었다.

● 지역적 중간세력국가로서의 통일한국의 위상 정립

영국의 한국전문가 포스터 카터(Aidan Foster-Carter)는 1992년에 출판한 한 소책자에서 서기 2000년에 남한주도의 한반도 통일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통일한국의 프로필을 그렸다. 그에 따르면, 그때의 통일한국은 인구 약 7천2백30만 명을 지닌 선진국이다. 경제적으로는 중국이나 인도와 같은 규모의 국민총생산을 가진 '아시아 제2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그의 예견을 인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대체로 2010년을 전후로 출현할 통일한국이 최소한 동아시아지역에서 중간세력국가로 국제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예견은 어렵지 않게 내릴 수 있다. 통일한국은 통일과정에서 실현될 남북의 군축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수준의 군사력을 유지하게 될 것이 확실하다. 따라서 대외정책의 수행에서도 당연히 평화와 우호선린을 강조하겠지만 강력한 군사력의 뒷받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통일한국은 기본적으로 강대국들 사이에 위치한 중간세력국가로서 자신의 안전과 자주의 확보를 1차적 외교목표로 뚝과 아울러 다른 나라들과 동등한 외교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21세기의 국제관계에서는 20세기의 국제관계에서와는 달리 권력정치의 요소들이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날카롭게 대립되어 있는 동아시아에서는 권력정치의 요소들이 여전히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한국이 자신의 자주독립을 유지하면서 이 지역의 분쟁과 관련해서는 일종의 조정자로서의 국제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세계는 이러한 희망이 실현될 것이라고 어느 누구도 자신있게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가 있다. 분명한 것은 지식·정보 사회로 전환되는 미래에는 교육수준이 높은 국가만이 적절히 생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적극적 지식공동체로서의 위상을 구축해

온 오늘의 대학은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견인차가 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화의 격랑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국력배양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대학은 바로 그러한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존재인 것이다. 그리고 대학생은 미래의 변화를 주도할 수련자인 것이다. 그 점에서, 분단현실의 극복이라는 미래의 변화는 오늘의 젊은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이루어내야 할 민족적 과제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볼 때, 오늘날 우리 대학생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들이 30대 중반을 넘어 서게 될 무렵에 한반도는 분명히 하나가 될 것이며, 그것은 그들이 통일한국에서 중요한 일꾼으로 일하게 될 것임을 말해준다. 통일한국의 시대에 성실한 일꾼이 될 수 있게끔 지금부터 충실히 준비하자.

통일과 21세기 - 전환기의 통일문제 이해 -

인쇄일/ 1998년 2월

발행일/ 1998년 2월

발행처/ 통일원 통일교육원

☎ 42-076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535 - 353

TEL : 901-7121 · 2 / FAX : 901-7024

인쇄처/ MAC POWER

〈비매품〉

